

동북아정세 변화와 남북 및 일북 관계 전망

인쇄/1998년 10월 22일

발행/1998년 10월 26일

발행처/민족통일연구원

발행인/양영식

편집인/북한정치군사연구실

등록/제2-2361호(97.4.23)

(142-076)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대표)900-4300 (직통)901-2525 팩시밀리 901-2542

© 민족통일연구원, 1998

민족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한국경제서적 : 737-7498

ISBN 89-87509-43-5

6,500원

역술회의총서 98-04

동북아정세 변화와 남북 및 일북 관계 전망

민족통일연구원·일본오카자키연구소(岡崎研究所)
공동주최('98.8.28) 발표논문집

민족통일연구원

○본 자료는 1998년 8월 28일 서울에서 열린 민족통일연구원과 일본 오까자키연구소(岡崎研究所) 공동주최 한·일 워크숍 회의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민족통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 차례 -

개 회 사 양영식(민족통일연구원장 원장)

▣ 주 제: 동북아정세 변화와 남북 및 일북 관계 전망

I. 제1회의

1. 북한의 경제실태와 경제정책의 변화 전망 1
스즈키(鈴木典幸, 일본 Radio Press 이사)
2. 김정일 주석취임 이후 대남정책 전망 16
김성철(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 토 론 24

II. 제2회의

1. 일·북 국교정상화의 전망 30
시게무라(重村智計, 일본 매일신문 논설위원)
2.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전망 54
박종철(민족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토 론 78

III. 제3회의

1. 동북아시아 정세와 한·일 안보대화의 필요성 87
다케사다(武貞秀士,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 실장)
2. 대북경제지원을 위한 한·일간 협력방안 105
오승렬(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 토 론 116

IV. 종합토론

회의일정

개 회 사

민족통일연구원장 원장

오늘 민족통일연구원과 일본오까자끼연구소가 공동 주최로 제2회 한일워크숍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재 세계사의 큰 흐름은 두 말할 나위 없이 탈냉전인데, 이는 필경은 동아시아 특히 남북한관계에도 굽이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역 국가들 간의 상호협력시대를 열기 위한 노력들이 여기 저기에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특히 두 가지 새로운 요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안보환경의 변화로서 동아시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안보협력체제가 필요하다는 점이고, 두번째는 경제환경의 변화로서 현재 지역국가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난국이 지역경제협력체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반도 남쪽에는 김대중 정부, 이른바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였고, 북쪽에는 곧 김정일 후계체제가 출범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남북한 간에 새로운 상호작용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환경의 변화로 작년에 미·일방위협력지침이 나왔고, 금년에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 수립이라는 새로운 요인이 등장한 것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한, 주변4강과 관련하여 4자회담, 6자회담 등의 논의들이 전개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본측 발제문들을 여러 차례 읽어 봤는데, 공감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새로운 동북아지역의 질서를 위해

경제협력체제 구축문제, 특히 안보협력체제 구축문제에 있어서 긴밀한 협력을 해야 된다는 제안을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고 싶습니다.

오늘 시간이 짧지만 세 개의 회의, 그리고 종합토론을 통해 구체적인 논의들이 진행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장래의 변화에 대한 시나리오, 그리고 이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대책에 관한 아주 심층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한국과 일본의 군사방위협력문제 등에 대한 방향 설정 등 기대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이미 지면을 통해 저희들과 친숙한 일본측의 스즈키·시게무라·다케사다 선생님, 그리고 나카지마 연구위원님, 전 해상자위대 사령관이셨던 야마모토 마코토 선생님, 현역으로 자위대에서 활동하고 계신 야마구찌 노보로 선생님께 좋은 토론과 발표를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 시간을 내주신 통일부 이호 국장님께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 차영구 장관님께서 참석해 주셨는데 이번 기회에 한국과 일본 간의 안보협력문제가 허심탄회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일의 전문가그룹, 연구소 사이에 냉엄한 현실을 둘러싼 양국간의 심층적인 협력문제를 논의해 오고 있습니다만은 정부의 정책 실무책임자 간에도 보다 깊은 협의를 할 수 있는 체제가 확립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는 한·일간의 긴밀한 공동연구, 협조체제 구축의 한 부분을 구성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민족통일연구원측의 전현준 실장님을 비롯하여 발표·토론을 하실 연구위원님들, 통역을 맡으신 배충남 사무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워크샵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유익한 토론을 기대하면서 개회사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제 1 회의

- 발 제: 「북한의 경제실태와 경제정책의 변화 전망」
스즈키(鈴木典幸, 일본 Radio Press 이사)
「김정일 주석취임 이후 대남정책 전망」
김성철(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사 회: 다케사다(武貞秀士, 일본방위청 방위연구소 실장)
- 토론자: 이 호 실장(통일부 정보분석실장)
임강택 박사(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시게무라(重村智計, 일본 매일신문 논설위원)

북한의 경제실태와 경제정책의 변화 전망

스즈키(鈴木典幸)
(일본 Radio Press 이사)

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경제실태를 전력문제, 농업문제와 식량난, 대외무역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장래에 대한 전망을 해 보기로 한다.

1. 경제전반

제3차 7개년 계획(1987~93년)을 달성하지 못한 북한은 3년간의

2 동북아정세 변화와 남북 및 일북 관계 전망

완충기(조정기간)를 설정하고, 「농업제1주의, 경공업 제1주의, 무역제1주의」 방침을 표방하였다. 김일성은 1994년 1월 1일의 「신년사」에서 이 ‘혁명적 경제전략’이 구현된다면, “몇 년 이내로 누구든 이밥과 고기국을 먹고 비단옷을 입으며, 기와집에서 살 수 있다는 우리 인민들의 세계적인 염원이 이루어져 인민의 물질·문화생활은 사회주의 사회의 본성에 합치되도록 더욱 윤택하고 풍부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1994년 7월 김일성 주석 사망후, 북한사회는 마치 경제까지도 ‘상복’을 입은 듯한 지경에 빠지고 말았다. 1994년 중국의 곡물 수출 제한으로 절박하게 된 식량부족 사태는 1995년, 1996년 2년에 걸친 홍수, 1997년도 가뭄과 해일피해로 인해 대량의 아사자가 발생되고 있다고 말해질 정도로 악화되었다. 또한 배급제도가 붕괴되어 자유시장에서 암거래 식량을 구할 수 있는 자와 식량 교환수단을 갖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는 큰 격차가 생기게 되었다.

북한은 식량사정이 악화되기까지 매년 ‘풍작’을 선전하였으나, 1995년부터는 식량난을 인정하면서 UN·국제인도조직 및 한·미·일 등으로부터의 인도적인 식량지원을 받아들일겠다고 방침을 대폭적으로 전환하였다. 이 사실은 북한의 경제가 식량수입을 위한 외화지출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북한경제는 에너지 부족으로 해외시장을 겨냥한 제품생산이 불가능하며, 외화획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식량뿐만 아니라, 에너지나 비료도 수입할 수 없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 이러한 악순환을 근절하기 위해 자유진영의 자본을 유입하려 해도 채무불이행에 의한 국제신용의 실추, 한·미·일과 군사적·정치적으로 대치하고 있다는 Country-Risk, 사회간접자본의 미정비 등 서구기업이 자본투자를 꺼리는 요소들이 지나칠 정도로 산재해 있다.

< 3가지 제1주의의 수정 >

1998년 1월 1일 발표된 「노동신문」과 「조선인민군」 두 신문 공동사설에서는 “고난의 행군”이 “고개를 넘었다”고 선전했지만, 1997년의 경제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공동사설은 “여전히 크나큰 경제적 난관이 산재해 있다”고 인정하고, 나아가 ‘3가지 제1주의’ 대신에 농업과 함께 중공업(석탄공업, 전력공업, 철도운수, 금속공업)을 우선시 한다는 새로운 방침을 표방했다.

이러한 방침 전환은 경공업 및 무역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므로 다음 단계로서 중공업의 부흥도 도모한다는 건설적인 구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전력·에너지 사정으로 국가경제가 엉망이 될 정도로 악화되었기 때문에 석탄, 전력공업의 회복을 당면 제1과제로 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심각해진 에너지문제

북한을 방문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바와 같이, 현재 북한에서는 정전이 일상화반사이며 전력사용시간도 제한되고 있다. 일반가정의 경우, 오전 5시부터 7시까지,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5시간 밖에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다고 한다. 전력사정이 절박한 것은 수도에서도 예외는 아닌데, 평양에서는 일년 평균 200회 이상의 정전이 발생한다고 한다. 전압이나 주파수도 안정되어 있지 않다.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공장생산은 마비된다. 현재 북한의 공장가동률은 2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북한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도 방송도중에 갑자기 전파가 끊어지는 현상이 빈발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전력이 부족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설상가상으로 절연재

4 동북아정세 변화와 남북 및 일북 관계 전망

인 전선피복이 부족하여 누전이 많고, 막대한 양의 전력이 방전되고 있다. 또한 휴즈를 입수할 수 없어 바늘로 대신하는 경우도 많다.

한국은행 추계에 따르면, 1997년 발전실적은 193억kwh로 1996년의 213억kwh보다 더욱 감소되었다. 1990년에는 277억kwh의 전력이 생산되었다. 석탄생산의 감소와 설비의 노후화로 인해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량이 대폭 감소된 것이 원인이라 한다.

이러한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1997년에는 북한 각지에 빈번하게 중·소형 수력발전소의 건설이 시작되었다. 중·소형발전소 건설의 '모범 선진지구'는 하천의 수와 수량이 풍부한 북부 자강도인데, 1997년 8월에는 김정일이 자강도 관계자를 치하하였고, 10월에는 중앙인민위원회가 '전기화 모범 군·시·구역 칭호'를 제정한다는 정령(政令)을 공포하기도 했다. 또한 12월에는 병역을 마친 청년 5,000여 명이 석탄·전력부문 생산지원에 동원되었다.

1998년에 들어 전력문제 해결은 북한경제의 최우선과제가 되었다. 신년공동사설은 석탄·전력 공급부문에 대해 언급하였고, 긴박한 석탄·전력문제의 해결을 촉구하였으며, "어느 지역에서나 중·소형발전소 건설을 대중적 운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1월에는 김정일 총서기가 6일간에 걸친 자강도 현지지도를 실시하고, 중·소형발전소 건설에 만족을 표하였다. 1월 29일자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일은 1997년 11월에 중·소형발전소 건설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1월 27일자 「노동신문」 사설은 "긴박한 전력사정은, 인민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우리들이 오늘날 강행군을 통해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것도, 제국주의자들의 압살책동을 분쇄하여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고히 수호할 수 있는나의 성패는 전력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였다.

북한에서는 1998년 5월 20일 현재 685개소의 중·소형 수력발전소와 513개소의 대용연료(메탄가스)발전소가 완공되어 전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풍력 등을 이용한 444개소의 발전소가 완공되어, 합계 1,640여 개소의 중·소형 발전소가 새로 건설되었다(「조선중앙방송」).

중앙이 지방에 대한 전력공급 의무를 포기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발전소 건설은 지방이 자력갱생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 지방단위에서 제각기 건설하는 발전소의 질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또한 중·소형 발전소의 평균 출력은 지극히 낮아 장차 발전소의 수가 크게 늘어나더라도 전력공급의 실태가 극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북·일 무역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일본에서 수입한 중고자동차 발전기를 수차(水車)에 연결시켜 수력발전소로 이용하고, 중고자전거의 발전기를 병렬로 연결시켜 풍력발전소로 이용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발전소 건설에 의해 인근가정의 전력사정은 일부 개선될 지는 모르나, 산업에 미치는 효과는 희박할 것이다.

3. 농업과 식량부족 현상

당연한 사실이지만, 북한이 최우선과제로 삼고 있는 것은 농업부흥과 식량문제 해결이다. 북한 정무원은 1997년 1월초에 김정일의 「인민의 식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관하여 내린 방침」을 관철시키기 위한 결정을 채택하여, ① 새로운 경지의 모색, ② 적지적작(適地適作)·적기적작(適期適作), ③ 비료·농약 등 영농물자의 생산·공급, ④ 물의 확보와 가뭄·홍수 피해의 방지, ⑤전인민 총동원에 의한 농촌지원투쟁의 전개를 표방하였다.

6 동북아정세 변화와 남북 및 일북 관계 전망

또한 1997년에 들어 도(道)·직할시의 농촌경리위원장을 차례로 경질시키고 정부원의 농업위원회 위원장도 경질시켜 농업부흥에 대한 북한지도부의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1997년 5월부터는 농촌에 군인을 대량 동원하여 모내기를 지원토록 하였다.

그러나 1997년에는 홍수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6월부터 7월에 걸쳐 “1961년의 기상관측 이후 사상 초유의 대가뭄”(「조선중앙방송」)이 평안남·북도, 황해북도를 중심으로 발생하여 논밭의 피해 면적은 47만 헥타에 이르렀다. 더욱이 8월에는 서해안 일대에서 해일피해가 발생하여 12월 「조선중앙통신」이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가뭄과 해일에 의한 곡물 감소량은 옥수수 120만톤 정도, 쌀은 60여 만톤에 이른다 고 한다.

1997년 들어 북한주민들은 식량난을 극복하기 위해 호박이나 버섯류 재배, 잉어 양식, 토끼 사육, 초지 조성과 염소·양의 방목 등과 함께 대개 사료용으로 쓰이는 돼지감자나 콩잎을 식용으로 사용하고, 감을 식사대용으로 하는 등 눈물겨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대적인 국제식량지원이 없다면 북한의 식량사정은 비참한 지경이 되었을 것이다. WFP에 따르면, 북한은 1997년에 82만 2,539톤의 식량을 지원받았다. 또한 한국 통일부의 추계에 의하면, 지원을 포함한 외국으로부터의 곡물유입은 1996년 105만톤에서 1997년에는 163만톤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북한의 홍수피해 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998년 3월에 성명을 통하여, 1997년 곡물생산고가 268만 5,000톤(탈곡시 214만 8,000톤)으로 연간 곡물필요량 784만톤(이중 식용 482만톤)을 크게 밑돌았다고 발표하였으며, 북한의 식량재고는 3월중에 바닥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국 통일부에서는 1997년 북한 곡물생산량은 348만 9,000톤으로 전년대비 5.4% 감소하였고, 1998년 최저필요량은 476만 4,000

톤으로 127만 5,000톤이 부족하다고 추계하였다.

1998년 2월 6일 북한 UN식량농업기구(FAO) 북한대표부(로마)에 근무하다가 서울로 망명한 김동수 3등서기관이 2월 18일 기자회견에서 “식량난에 대해 외교부로부터 하달된 각종 통계자료는 식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소 과장되게 작성된 자료”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측의 발표 수치에는 국제사회의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정치적 배려가 개재되어 있다.

1998년 신년공동사설에서는 새롭게 ‘이모작 추진’을 표방했다. 이는 UN기구의 농업전문가의 조언으로 1997년 봄에 실시된 이모작 실험(3만 8,000헥터)이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1998년에는 7만 헥터에 이모작을 실시하였다. FAO 조사에 의하면, 1998년 3월에는 일부지역의 배급이 중단된 듯, 봄에 생산된 감자와 밀 등을 먹으며 견디고 있다고 한다. 1998년 여름에는 계속되는 장마로 작황이 불안한 상태이지만, 중국으로부터의 지원도 있어 어떻게든 가을 수확기까지는 견딜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 식량부족은 1990년 이래 항시적인 현상으로 부족분은 중국 등지로부터 수입하여 버티고 있다. 북한의 농업부진은 벼농사의 밀작(密作)과 옥수수 연작에 따른 토지의 피폐, 병충해의 증가, 비료부족, 농기계의 연료부족, 전력부족, 협동농장제도에 따른 농민의 생산의욕 감퇴 등의 요소가 혼재된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된 것으로 간단히 타개될 수는 없다. 북한은 일정기간 곡물부족분을 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고난의 행군’은 계속될 것이다.

이모작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최근 북한 농업관계자는 외부로부터의 조언을 참고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 농림부가 북한 농업부흥을 위해 주변관계국과의 협력을 통한 형태로 국제기구인 「한반도 농업개발기구」(KADO)의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된 바

있다. 북한당국이 이러한 국제기구의 포괄적인 농업부흥 프로젝트를 수용할 수 있다면, 북한의 농업·식량문제 해결에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일본도 북한과 기후조건이 비슷한 일본 동북지방의 냉해 극복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농촌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농민의 생산의욕을 자극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4. 무역상황

1991년의 소련연방 붕괴를 기점으로 북한의 대외무역규모는 거의 반감하여 최근 몇 년간의 수출입총액은 20억 달러를 겨우 상회하는 정도로까지 위축되었다. 현재 중국·일본·한국 등 3국과의 무역이 북한 총 무역액의 6할 정도를 점하고 있어 이들 3국과의 무역동향의 분석을 통해 북한의 무역상태를 판단할 수 있다. 북한에서 수입하는 주요 품목은 ① 식량, ② 원유, ③ 코크스, ④ 고무 등으로 대외채무는 115억 달러(러시아 43억 달러, 중국 22억 달러, 일본 9억 달러, 서구국가군 18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1997년의 북한경제에서 유일하게 성장을 나타낸 것은 대외무역 분야로, 「일본무역진흥회」의 추계에 의하면, 1997년도의 무역총액은 24억 9,890달러로 1996년과 대비하여 10% 증가하였다. 그러나 무역구조가 건전하다고는 볼 수 없다.

1997년 북·중 무역량은 6억 5,000만 달러를 돌파했다. 이는 과거 10년간을 보더라도 높은 수준이다. 북한의 수입품목을 보면 원유, 과자류·담배 등 기호품 수입을 제한하는 한편, 곡물, 비료의 수입은 확대하였다. 곡물수입은 80만톤대에 이르는 것 같다. 또한 북한은 무연

탄, 목재, 아연 등의 원료 수출에 전력하여 수출액을 전년대비 거의 두 배로 늘렸다.

< 표 1 > 최근 중국의 대북한 곡물수출(1997년 수치는 추계)

(단위 : 톤)

구 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곡 물	588,195	903,594	265,601	46,547	129,188	513,065
밀가루 등	60,887	39,708	54,591	74,029	392,859	300,315
합 계	649,082	943,302	320,192	120,576	522,047	813,380

1997년 북·일무역은 580억 엔을 돌파하여 과거 5년중 최고 숫자를 기록하였다. 특히 북한측의 수출은 365억 엔 정도로 15% 증가되었다. 1996년에 비하여 수입량이 급증한 것은 소사육용인 벧짚과 송이 버섯때문이며, 특히 대만의 벧짚이 구제역병(FMD) 때문에 수입이 금지되어 북한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었다.

또한 바지락, 대합, 무쇠, 북일 합영기업이 생산한 양복의 대일수출도 호조를 보였다. 일본으로부터는 중고자동차의 수입이 급증하였다. 발전기나 일본제 위탁가공 전자제품인 노이즈필터용 영구자석의 수출도 늘었다. 반면 중유의 수출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1997년의 남북한 교역은 1988년의 교역개시후 처음으로 3억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측 수입의 대부분은 지금까지와 같은 철강, 금피와 아연이며, 한국측 수출품의 대부분은 섬유류이었다. 경수로 공사 관련 물자는 수출량의 18%에 달했다. 또한 수출입 모두 위탁가공분이

10 동북아정세 변화와 남북 및 일북 관계 전망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1997년 북한은 무연탄, 목재, 금괴, 철강 등의 원료와 송이버섯, 벗짚 등 농수산물 수출에 의해 곡물, 비료를 조달하고, 동시에 위탁가공, 중고차의 판매(專賣) 등에 의한 외화획득에 주력하였다. 이와 같이 식량을 확보하는 한편, 석유의 수입은 극도로 제한하고 있었던 것 같다. 국내에서 중소형 수력발전소를 지속적으로 건설함으로써 전력부족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1998년에는 한국 IMF 위기의 여파가 북한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 북한의 수출품목인 금괴, 아연, 철, 농어업생산품의 반입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1998년 상반기의 남북교역 통계를 보면, 북한으로부터 한국에 반입된 물품은 전년도 같은 시기에 비해 67% 감소, 한국으로부터의 북한 반출은 5.8% 감소하였다.

1998년 1~4월의 북·중무역도 무역총액 1억 1,546만 7,000달러(작년 동일시기 대비 26.7% 감소)로, 그 내역을 보면 중국측 수출 9,500만 1,000달러(동 30.3% 감소), 중국측 수입 2,046만 6,000달러(동 3.9% 감소)로 저조하였다.

1998년 1~5월중 일본과 북한의 무역은 수출입총액 223억 2,629만 5,000엔(작년 동일시기 대비 16.5% 증가)로, 내역을 보면 일본측 수출 105억 4,304만 7,000엔(동 43.4% 증가), 수입 117억 8,234만 8,000엔(동 7.5% 감소)로 일본측 수출은 증가했지만, UN지원분 쌀의 재수출 3만 8,781톤(28억엔)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하면 증가분이 거의 없다. 1998년의 북한무역 전망은 결코 밝지 않다.

5. 마지막으로

북한의 전 산업을 통해 말할 수 있는 것은 항상 의욕이나 연구 여지가 상실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의 공장지배인은 공장설비나 기계를 자신들이 구입한 사실이 없으며, 설비가 노후되면 정부에 요구하여 보충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의 개념이 없다. 또한 공장은 상품을 생산할 뿐 판매에 대해 고려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원가 및 가격 개념도 없으며, 소비자의 욕구도 고려하지 않는다. 자재관리가 철저하기 때문에 실험을 위한 소비가 절대 허용되지 않아 신제품 생산이나 개량의 기회가 상실되고 있다.

농업의 경우도 획일적인 관리하에 논밭에 나가 있는 시간만이 문제가 되어 시험재배는 허용되지 않고 영농의욕이 상실되어 있다. 질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양만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돌을 채워 넣은 가마니를 국가에 공출하는 농장도 있다.

한편으로 암시장에서의 물물교환을 위한 제품 반출은 물론, 설비까지도 고철로 뜯겨 나가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로부터 배워 경쟁원리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지 않으면, 북한경제는 장기간에 걸쳐 저공비행을 계속하게 될 것이다.

북한경제의 최대 약점은 강대한 인민군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있다. 남북합의서를 쌍방이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다면, 병력을 감소시키고, 군의 연료·자재의 일부를 민간수요 부문에 충당시켜 경제재건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일은 소련·동구의 교훈으로부터 전면적인 개혁·개방이 정권 전복을 초래한다고 이해하고 있어 앞으로도 제한적인 개방에 머무를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제한개방'일지라도 한반도 내에 평화프로세스가 진행된다면, 북한은 어느 정도 국제적 신용을 획득하고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경제적 보완성이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기업의 유희시설을 북한에서 재활용하는 남북 공히 이익이 되는 사업이나 그러한 시설을 대상으로 한 남북전력망, 운수라인 구축은 실현시켜 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김정일 최고사령관에게는 군이 국가이며, 군대는 '제3국의 압살책동'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하며 영도자의 지위를 보전하기 위한 최대의 보루이다. 더욱이 핵·미사일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김정일은 잠재적 위협을 카드로서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획득하는 전략을 즐겨 취하고 있다. 또한 김정일 정권은 국민의 충성과 단결을 획득하기 위해 '적의 위협'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일이 군을 희생시키는 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더 이상 없는 듯하다.

북한은 금년 9월에 열리는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의 투자설명회에서 9억 6,000만 달러의 외국투자를 유치할 예정이다. 또한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에 이어 원산과 남포를 보세가공구역으로 선정하는 구상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서구기업 투자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신뢰성과 안전한 환경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현대그룹의 금강산관광 및 북한에서의 각종 사업의 성과가 무드를 바꾸는 측면에서 하나의 시금석이 될 가능성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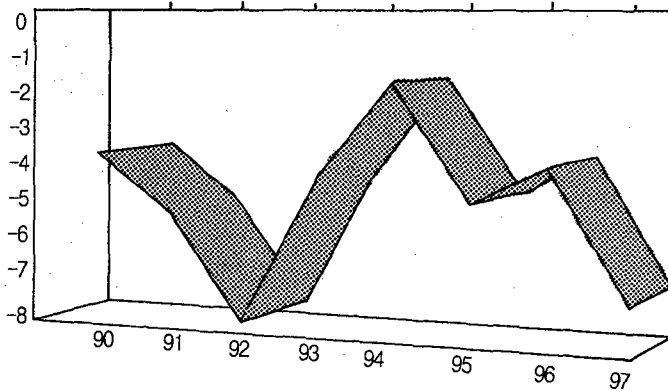
< 표 2 > 북한의 GDP 성장률 (한국은행 추계)

(단위: %)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GDP 성장률	△7.7	△4.2	△1.8	△4.6	△3.7	△6.8
농림어업	△2.7	△7.6	2.7	△10.5	1.0	△3.9
광업	△6.1	△7.2	△5.6	△2.3	△11.8	△11.8
제조업	△17.8	△1.9	△3.8	△5.3	△8.9	△16.8
전기가스수도	△5.7	△8.7	4.2	0.1	△7.8	△9.6
건설업	△2.1	△9.7	△26.9	△3.2	△11.8	△9.9
서비스	0.8	1.2	2.2	1.5	0.8	1.1
GNP 성장률	△7.6	△4.3	△1.7	△4.5	△3.7	△6.8

* 「1997년 북한 GDP 추정결과」, 한국은행 1998.6.16에서 인용

< 그림 1 > 북한의 GDP 성장률



< 표 3 > 북한과 한국의 무역규모 비교

	북한(A)		한국(B)		비율((B/A))	
	1996	1997	1996	1997	1996	1997
무역규모(억 달러)	19.8	21.8	2,800.5	2,807.8	141.4	128.8
수 출	7.3	9.1	1,297.2	1,361.6	177.7	149.6
수 입	12.5	12.7	1,503.4	1,446.2	120.3	113.9
수출입의존도*(%)	9.3	12.3	58.3	64.2	-	-

* 수출입의존도=수출입액(통관기준) / 명목 GNP×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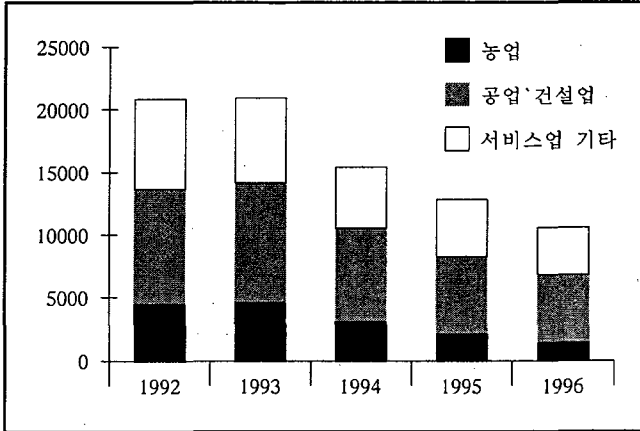
< 표 4 > 북한의 GDP(1992~96, 북한정부의 UN제출자료)

(단위: 100만 달러)

	1992	1993	1994	1995	1996
농업	4,551	4,680	3,223	2,228	1,556
공업·건설업	9,122	9,483	7,341	6,042	5,283
서비스업 기타	7,160	6,762	4,858	4,532	3,748
GDP	20,833	20,934	15,422	12,802	10,587
전년비성장률(%)					
농업		3.00	△31.30	△30.90	△30.20
공업·건설업		4.00	△22.60	△17.70	△12.60
서비스업 기타		△5.60	△28.20	△6.70	△17.30
GDP		0.50	△26.30	△17.00	△17.30
인구(100만인)	20.73	21.06	21.38	21.70	22.02
1인당 GDP(달러)	1,005	994	721	590	481

출처: 「북한의 현황 1998」 (Radio Press)

< 그림 2 > 1992~96년 북한 GDP



김정일 주석취임 이후 대남정책 전망

김 성 철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1. 북한 대남정책의 추이

< 1990년대 대남정책의 지속과 변화 >

- 북한은 1964년 2월 이래 3대(북한, 남한, 국제)혁명역량 강화를 통한 ① 사회주의체제의 유지와 ② 남한의 적화통일을 중요한 국가 목표로 간주해 왔으나, 소련 및 동구의 체제변혁과 북한내 체제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사회주의체제 유지라는 첫번째의 목표에 주력하게 됨.
 - 물론 이것은 북한이 남한의 적화통일이라는 두번째의 국가목표를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 국가목표들에 대한 비중상의 변화라고 보아야 함.

- 이같은 변화는 1988년 김일성의 신년사 중 ‘선(先) 남북공존, 후(後) 연방통일’이라는 주장에서 드러나기 시작하였으며, 동구 및 소련 사회주의체제 해체로 북한체제의 취약점이 노정되면서 더욱 구체화됨.

- 그러나 북한이 체제유지라는 국가목표(그리고 '선 남북공존' 주장)를 남북한관계의 실질적 개선과 평화적 공존을 통해 성취하려 하지 않았음.
- 북한은 1991년 12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사이의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 작성에 합의함으로써 남북대화를 통한 평화와 공존을 추구하는 듯 보였으나,
 - 1993년 1월 한·미 양국의 팀스피리트훈련 실시 결정을 계기로 남북대화를 중단함.
- 김일성은 1993년 4월 「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발표하여, 남조선혁명을 통한 하나의 조선 건설이라는 기존의 패권적 혁명전략에서 남북한간 '현상유지적 경쟁전략'으로 이행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 민족자주, 사대주의 및 민족허무주의 배격을 강조하여 남한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협력과 지원을 배제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었음.
- 북한은 핵개발 의혹을 둘러싸고 IAEA의 특별사찰 요구 등 국제적 압력을 받던 중, 1993년 3월 NPT를 탈퇴함으로써 체제유지라는 국가목표를 미국(또는 미국이 대표하는 국제사회)과의 대결구도 속에서 성취하려는 전략으로 전환하게 됨.
 - 이 과정에서 1994년 7월 김일성의 사망으로 김정일은 대미관계에서 전권을 행사하게 되었으며,
 - 핵동결 대가로 경수로 건설을 양보받아내는 1994년 10월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를 이끌었음.

18 동북아정세 변화와 남북 및 일북 관계 전망

- 결국 북한의 김정일은 핵문제를 계기로 체제유지라는 국가목표를 위해 1993년경부터 ‘통미봉남(通美封南)’으로 요약되는 대남 및 대외정책을 구사하기 시작하는 바,
 - 이것은 대미관계 개선을 꾀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 및 서방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하는 반면, 남한과는 대화를 단절하고 적대 관계를 고수하는 것이었음.

※ 1994년 10월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와 함께 1996년 4월 한·미 정상들에 의한 「4자회담」 제의는 한반도문제가 국제화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북한은 이같이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통미봉남’을 통한 남한배제 정책을 보다 구체화시켜 나갔음.

< 신정부 출범 이후 대남정책 동향 >

- 1997년 말 남한의 외환위기로 인한 IMF체제 등장과 1998년 2월 출범한 신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북한의 대남정책에 다소의 변화를 초래하였는 바, 북한은 일방적인 ‘통미봉남’ 대신에 금강산개발 등 민간차원의 경협에 대해 적극적 태도를 보임.
 - 남한의 대북정책 중 상호주의 원칙에 대해서는 ‘전형적 장사꾼의 논리,’ ‘반민족적 분열의 논리, 대결의 논리’로 매우 비판적임(「로동신문」, 1998.5.23, 7.30).
- 이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양대 국가목표(사회주의체제 유지, 남한 적화통일) 중 전자에 비중을 더 두면서도 후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북한은 1998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조국통일3대헌장 실현, 남한의 연북화해정책 요구 등을 주장하였고, 김정일은 「4·18서한」(“온민족이 단결하여 조국의 평화통일을 이룩하자”)에서 5대방침을 제기함으로써 기존의 대남관련 정책을 견지하고 있음.
 - 조국통일 3대헌장: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 3대원칙,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 5대방침: 민족자주의 원칙, 애국애족의 온민족 단결, 남북관계 개선, 외세·반통일세력 반대, 내왕·접촉·대화·연합 강화
 - 이에 따라 북한은 8·15통일대축전 준비과정에서 남한내 불법단체인 범민련과 한총련 참가를 끝까지 고수함.

- 북한은 또한 남한의 경제악화와 실업난으로 인한 사회혼란을 틈탄 남조선혁명역량 강화를 위해 침투 공작을 지속하고 있는 바, 그 예로 1998년 6월 속초 잠수정침투사건과 동년 7월의 묵호 무장간첩침투사건을 들 수 있음.

2. 10기 대의원선거를 통해 본 대남관련 인물 동향

- 1998년 7월 북한 전역을 걸쳐 실시한 제10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서 드러난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총 687명 중 새로 선출된 대의원은 443명으로서 교체율 64% 기록(제9기 교체율 31.4%)
 - 사회 전반에 걸친 군부의 역할 증대에 상응하여 군장령 및 군관이 101명에 달함(제9기 57명).
 - 주요 탈락자: 와병설의 강성산, 숙청설의 서관희·이봉원·최용해·김달현·현철규 등

20 동북아정세 변화와 남북 및 일북 관계 전망

- 대남관련 인물 중 존속인물로는 김용순·오극렬·강관주·임동옥·이종혁·염태준·백남준·한시해·강영섭·박태호·백인준·장재철 등이며, 탈락자로는 권희경·전금철·안병수·임춘길·강병학·한영수·이몽호·김대식 등이 있음.
 - 탈락자는 최근 건강이상이거나 대남사업에서 업무실패를 드러낸 인물임.

- 대의원선거에서 대남정책 관련인물의 부침을 통해서 본다면 몇몇 대남관련 인물들이 탈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남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 그 이유는 최고결정권자는 김정일이라는 점과 김용순·오극렬을 비롯한 대남관련 고위간부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특히 오극렬(당 작전부장)은 6월 속초 잠수정침투사건과 7월의 무장간첩침투사건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견제하고 있는 바, 대남 침투공작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

3. 김정일 주석취임의 의미

- 김정일의 주석취임은 대내 정치적인 변화로서의 의미보다는 대외적인 의미가 큰 것으로 보임.

- 북한은 김정일의 주석취임을 통해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 이후 지속되어온 김일성 유훈통치의 이미지를 벗어 던지고 김정일시대의 개막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계기로 삼을 것임.

- 지금까지의 '얼굴없는 외교' 대신, 김정일을 수반으로 삼는 정상적 주권국가 이미지를 부각시킴.
- 한편 김정일은 주석취임에 즈음하여 대내적인 체제정비, 즉 공석중인 기관 책임자들의 임명을 통해 당·정의 정상적인 가동을 추가하는 계기로 삼을 것임.
 - 현재 공석중인 자리는 정무원 총리, 인민무력부장, 국가안전보위부장, 당 국제 비서 및 농업 비서, 당 조직지도부장, 당 통일전선부장 등 20여 개에 달함.

4. 전 망

- 주석취임 행사 중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으로 시정연설을 들 수 있는 바, 김정일은 공화국 건설 50주년에 즈음하여 기존 3대 혁명에 의한 과도기를 종결하고 '사회주의의 높은 단계'로의 전이를 선언할 것으로 보임.
 - 남한의 경제악화와 IMF체제는 북한이 체제우월성을 과시하는데 있어서 소재거리가 될 것임.
- 대남정책과 관련, 1998년 「4·18서한」에서 밝힌 민족대단결 5대방침을 재강조할 것으로 전망됨.
 - 이같은 맥락에서 북한 조평통은 최근 5개항의 공개질문장을 통해 미군주둔, 국가보안법, 상호주의와 햇볕정책, 한미합동군사훈련 등을 언급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8·15경축사」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음(「조선중앙방송」, 1998.8.20).

22 동북아정세 변화와 남북 및 일북 관계 전망

- 한마디로 김정일시대의 대남정책은 일정한 수준의 정치·군사적 긴장을 유지하면서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북한식 정경분리’ 정책의 특징을 가질 것임.
 - 특히 남한의 정경분리 원칙을 활용하여 나진·선봉 경제특구 및 관광특구 개발 등에 민간부문의 적극적 투자를 유치하려고 노력할 것인 바, 이 점이 과거 ‘통미봉남’과는 다른 차원의 대남 정책이라 할 수 있음.

- 북한은 4자회담이나 유엔사·북한군장성급회담에 참여하되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한간 긴장해소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며, 남한 신정부의 상호주의 원칙에 대한 피해의식 때문에 정부당국자간 대화·협력에도 소극적일 것임.
 - 그러나 북한은 김정일의 주석취임으로 북한측 파트너(국가수반) 등장을 과시하여 경제적 실리의 극대화 차원에서 남북 당국자간 대화에 응할 가능성도 남아 있음.

- 중국의 홍수 피해와 유전지역 범람으로 중국으로부터의 식량 및 유류 도입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북한은 남한과 국제사회로부터의 민간부문의 인도적 지원요청에 힘쓸 것으로 보임.
 - 이를 위해 남한 종교인, 언론인들의 방북초청과 농업개발을 위한 국제 금융기구 관계자들의 입북을 확대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체제 개혁과 적대적 대남인식을 가지고 있는 군부의 위상 강화 및 사회적 역할 증대는 지속적으로 남북관계의 발전에 중요한 장애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북한 군부는 막강한 제2경제(군수산업) 분야의 투자에 의해 군사력 강화와 외화 획득에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당이 행했던 많은 역할을 떠맡고 있는 바, 1997년 4월부터 공장·기업소·협동농장·철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토론>

사 회: 네, 발표 감사합니다. 그럼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호 국장: 북한경제에 대한 연구는 강가의 모랫밭에서 사금조각을 찾아 이를 원료로 모자이크하는 것에 비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스즈키 선생의 논문을 보면서 훌륭한 모자이크를 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발표내용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은 없고, 비슷한 내용 중에서 보충할 수 있는 부분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북한의 경제통계 발표동향을 보면, 국제적인 경제지원과 외자유치의 필요성 때문에 북한경제도 국제화되어가는 추세에 있고, 아주 기초적이기는 하지만 근사치에 가까운 통계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대외경제위원회가 발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로의 투자안내』라는 책자를 보면 1992~96년도 북한의 GDP, 경제성장률, 1인당 GNP를 소상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추세가 더 강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에너지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즈키 선생의 논문에는 북한이 최근 중소형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매우 주력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석해 보면 중소형발전소 1개당 발전능력은 평균 24.4kw에 불과합니다. 이는 북한의 중소형발전소가 산업용이 아니라 가정용이고, 북한의 에너지를 해결하는 데에는 크게 기여할 수 없음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스즈키 선생의 논문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최근에는 사람의 인력으로 조명을 밝히는 자전거발전기라는 것도 선전되고 있습니다. 에너지문제 해결의 관건은 석탄생산 증가와 기존 화력발전소의 정상가동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으로 식량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통일부에서는 최근 들어서 매월 북한의 식량상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에서는 하루 두 끼 먹는 것이 일반화·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소비수준을 감안하여 수급동향을 살펴보면 금년 추수기까지 약 31만톤 정도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국제지원 약 속분 중에서 7월 말까지 북한에 도착하지 않은 32.5만톤이 북한에 들어가면 금년 식량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임강택 박사: 먼저 스즈키 선생의 논문내용에 대체로 동의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북한의 경제상황과 관련한 정책변화 전망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북한이 앞으로 어떠한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를 전망하는 문제는 북한을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자 아주 힘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스즈키 선생의 논문에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북한경제는 스즈키 선생님이 지적하였듯이 심각한 악순환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이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북한의 정책변화를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산요소의 부족현상에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생산에 투입할 원자재, 연료, 전력 등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현상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만성적으로 에너지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산시설이 가동률이 아주 낮으며, 그 결과 지속적으로 생산량이 감소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감소는 수출부진으로 이어지고, 수출부진은 북한의 외화부족 현상을 악화시키고 생산요소의 수입을 제한함으로써, 생산요소의 부족 현상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당국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단기적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외환자금을 단시기에 확보하여 생산 요소의 부족현상을 극복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합영법을 선포하고 나진·선봉지역을 자유무역경제지대로 지정한 것이나 무역제일주의와 새로운 무역체계를 도입한 목적도 모두 부족한 외화를 확보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북한의 이러한 노력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며, 그 결과 생산요소 부족, 생산량 감소, 수출 부족, 외화 부족과 생산요소 부족이라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탈피하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북한은 당분간 외화획득을 경제회생을 위한 최고의 정책과제로 삼고 이를 위해서 가능한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화 획득이라는 측면만을 국한해서 볼 때, 북한이 앞으로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은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인 경제개방정책의 확대와 대외적인 평화공세 강화입니다. 두번째는 배상금 청구를 목표로 한 대일수교 노력과 핵무기·미사일 개발 등을 위협수단으로 한 미국으로부터의 지원획득입니다. 세번째는 남북경협 및 사회문화분야의 교류 확대를 통한 남한 기업인 및 민간인으로부터의 금품수수입니다. 네번째는 구 사회주의권과의 관계복구를 통한 경제지원 획득입니다.

시게무라: 저는 신문기자로서 가능한 한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여 그 정보가 북한체제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하는 연구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방북한 소식통을 통해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총리후보로 내정되었던 김달현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서 탈락한 사실을 예로서 말

썩드리겠습니까.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최종명단이 나오기 전까지 경제전문가인 김달현은 총리후보, 연형묵은 당 조직비서로 내정되었는데 김달현이 내정사실과 세대교체 등을 미리 발설함으로써 원로들의 반발, 특히 김용순의 견제를 받아 탈락하였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현대 정주영회장의 방북에 관한 것입니다. 소를 지원받은 강원도에서는 사료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불만이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해 들은 김정일은 남측의 소지원을 큰 일인 것처럼 보고한 김용순을 비판하였다고 합니다. 더욱이 소값 파동 때문에 소를 보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현대의 금강산관광도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며,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1~2회에 그칠 것 같다고 말하는 북한간부들도 있습니다.

한국의 연구자들은 한국의 정책이 변화하면 북한도 변화하리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남한이 아무리 변화해도 북한 스스로 의지가 없는 한 변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만한 남측의 요소도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냉전시대에는 중·소가 북한을 지원할 수 있었지만 탈냉전시대에는 북한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김성철 박사의 지적처럼 통미봉남의 정책을 통해 미·일로부터 지원을 얻으려고 하며, 한국으로부터 지원을 얻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정책결정체계는 김정일을 정점으로 부처간 협조가 없는 경쟁적인 단선보고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내 대남조직 간의 경쟁을 유발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김용순의 통일전선부가 현대 정주영 회장을 초대하여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 반대하는 그룹이 있으며, 정책결정과정에서 내부적으로 통일되지 못하고 갈통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정부가 정경분리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남한기업들이 비즈니스적 차원에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남한기업들이 북한과 접촉할 때 김용순이나 김달현 등에게 사전에 일정의 중계료를 지급하고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때문에 북한의 대남부서들은 남한기업들로부터는 언제든지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뇌물 없이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대북 협력사업을 진행시켜야 북한의 태도도 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김성철 박사의 발표문중 '사회주의 높은 단계'로 전이를 선언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즈끼: 저희 논문을 보충해 주신 이호 선생과 임강택 박사께 감사드립니다. 금후 전망은 곧 개최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새로운 경제정책이 발표될지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경제회생계획이 발표되면 다행이지만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북한과 같이 환경이 어려운 나라에서 식량문제 해결과 공업발전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것은 힘듭니다. 일제 식민치하에서는 북한에서 열두 번의 자연재해가 있었습니다. 북한의 경제재건을 위해서는 이러한 자연환경을 고려한 발전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한데, 산간개발 중심의 계획을 크게 방향 전환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김성철 박사: 저의 논문의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보충해 주신 시계무라 선생께 감사드립니다.

남북경협에 있어서 경제원리가 아닌 금품수수나 남한기업 간의 경쟁유발 경향은 남한의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게 하는 요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표적인 남북경협

인 금강산개발계획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희망을 버릴 수 없는 것은 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로의 중소기업의 진출입니다. 나진·선봉지역에서는 북한 타지역에 비해 활기차고 자유스러운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타지역 주민들은 이 지역으로의 이주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나진·선봉지역은 남한상품의 중국·러시아로 진출하는 데 훌륭한 물류기지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나진·선봉지역에 설치된 물류기지 1층에는 남한기업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어서 남북경협은 북한이 많은 돈을 요구하고 어려운 측면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되어야 하지만, 나진·선봉과 같은 특수한 지역으로의 남한기업의 진출 여지는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시계무라 선생의 마지막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북한은 과도기의 3대혁명, 즉 사상·문화·기술에서의 혁명을 통해서 과도기를 끝내고 사회주의 높은 단계, 즉 공산주의 단계로 넘어간다고 이론적인 설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문헌에서 3대혁명에 대한 언급을 찾아보기 힘들고, 현재 3대혁명소조운동이 종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북한은 '사회주의 대행군'을 주장하면서 남한이 IMF로 고통받고 있는 반면 북한은 사회주의 높은 단계로 진입하였다는 이론적 설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제 2 회의

- 발 제: 「일·북 국교정상화의 전망」
시게무라(重村智計, 일본 매일신문 논설위원)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전망」
박종철(민족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사 회: 허문영 박사(민족통일연구원 통일정책실장)
- 토론자: 김영춘 박사(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이교덕 박사(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다케사다(武貞秀士, 일본방위청 방위연구소 실장)

일·북 국교정상화의 전망

시게무라(重村智計)
(일본 매일신문 논설위원)

1. 북한의 대일(對日)전략과 일본의 인맥

가. 북한 분석의 기본

한반도문제를 분석하는 일본학자들(전문가)의 대다수가 국제문제

나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없이 분석을 행하고 있다.

국제정치적 분석은 ‘붕괴한다’, ‘전쟁이 일어난다’와 같은 결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요소 및 과정과 분석의 방법이 중요하며, 사실을 사실로서 냉정하게 분석해야 한다. 일본에서의 한반도문제에 대한 판단이나 예측의 오류는 한국이나 북한에 대한 ‘선호의 감정’이 선행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국제문제와 정보 분석의 기본으로 ① 상대방의 입장과 환경을 100% 현실에 입각하여 이해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것, ② 정보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 즉 상대방에 대한 기초적 지식(사고방식, 역사적 전통, 행동양식의 이해)이 필요하다.

일본의 국익에 손실을 주지 않고, 일본과 한국의 전략적인 대응과 외교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정치·외교·안전보장에 대한 현상과 그들의 의도를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의 현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나. 왜 북한은 방북단(訪北團)을 요청했는가?

갑작스런 노동당 대표단의 방일 요청

“1997년 말부터 1998년 초에 걸쳐, 북한과 조총련은 자민당 간부에게 노동당 대표단의 초청을 강력히 요청하였다”고 할 때 북한이 방일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지만, 김용순의 메시지를 조총련 허종만 부의장을 통하여 전달한 것으로 정확히는 김용순 개인의 강력한 요청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정보수집과 분석의 초점으로서 진실을 확실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 검토사항은 노동당 대표단의 ‘목적’이 무엇인가이다. 일본에 왔을 경우 성과를 거두고 귀국할

수 있는가이다. 이 경우 북한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그들의 고려에 대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김용순이 갑자기 일본을 방문하고자 생각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하기로 한다.

외국에 나가지 않는 북한 간부

북한의 정치국원이나 서기, 각료, 부총리급이 해외에 나가 활약하는 것은 드물다.

북한에서의 외국출장은 원칙적으로 김정일 총서기의 허가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부서 책임자의 허가를 득하고, 김영남 외교부장에 신청하여 김정일의 허가를 얻는다. ① 김정일에게 보고할 때, 어떠한 출장성과를 거둘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약속하는데, 성과가 없을 경우 비판을 받게 되므로 해외에 나가지 않는 것이 안전한 것이다. ② 해외에 나갈 때 비용이 문제이다. 규정된 예산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이 충당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황장엽의 경우도 어떻게 망명에 성공했는지 아직도 확실하지 않다.

김용순은 미국(1992)과 일본(1991)을 방문할 수 있었다. 김용순은 지도자의 의향을 읽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능력이 뛰어나다.

김용순 서기의 성공과 좌절

김일성의 의향을 재빨리 간파한 김용순은 일·북 및 미·북간 관계개선을 자신의 성과로 삼기 위해 뛰어든 것이다. 이렇게 보면 김용순은 어느 회사나 관공서에서도 볼 수 있는 타입의 인간이다. 자신의 신념은 없으나, 상사의 의향을 재빨리 간파하고 술선하여 그 일에 매달리며 아부하는 타입이다. 상사의 의향을 받들고 있어 무서울 것이 없으

나, 실패하면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일을 끝내는 술수가 뛰어나다.

이는 표면에 나타나지 않고 뒤에서 조정하며 상사의 의향과 회사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면에서는 큰 인물이지만, 김용순은 무엇이든 “자신이 성공시켰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안되는 성격으로 이 성격 때문에 원로들로부터 미움받게 되었다.

예를 들어 일·북 정상화 교섭과 관련하여 金丸 자민당 부총리의 방북을 실현시킨 것은 김용순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김일성과 직접 연결된 조총련계 재일교포이었다. 이를 계기로 김용순은 좌절을 경험하게 되었고, 1992년 뉴욕에서의 미·북 고위급회담에서도 그는 이러한 성격으로 또 한 번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다. 북한의 내부사정

김용순 2월 방일 요청과 외무성의 방침 전환

김용순이 관리하는 통일전선부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2월에 미국을 방문할 필요가 있었다. 원래는 가을에 일본 자민당 방북단이 왔을 때 쌀지원과 일·북정상화 교섭을 약속할 예정이었지만 그 계획이 바뀐 것이었다.

한편 일본외무성은 1997년 말부터 ‘국교정상화 교섭 무조건 재개’ 방침을 바꾸어 ‘납치의혹의 진전이 없는 한 교섭은 재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는 정상화교섭을 재개하더라도 납치의혹의 진전이 없는 한 그 교섭은 또 다시 결렬되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정서상으로도 납치의혹을 덮어둔 채 일·북 정상화 교섭을 재개하는 것은 무리가 있었다. 외무성의 이 판단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

일본 외무성은 그 때까지 해외에서 차국민의 보호에 소극적이었던가 하는 비판을 받고 있었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로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북한이 어떻게 대응하더라도 일본정부로서는 일본국민의 안전과 납치의혹을 분명히 해야만 하였다.

만약 김용순이 방일하여 납치의혹을 해명하지 못한다면 일·북 국교정상화 교섭은 재개될 수 없는 것이며, 쌀 100만톤 지원의 약속을 받아내는 것도 어렵다.

통일전선부와 국가보위부

통일전선부와 국가보위부는 원래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한다. 계용태와 김용순의 사이가 개인적으로도 좋지 않음은 물론 통일전선부가 제멋대로 행동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국가보위부는 수사 권한을 가진 공안기관이지만 통일전선부도 대남공작기관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특히 국가보위부는 통일전선부가 이용하고 있는 재미한국인들을 한국의 이중스파이로 보고 엄격하게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전선부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통일전선부와 국가보위부의 대립을 격화시키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이 북한에서 확대되면 북한내부의 공작기관과 공안기관의 충돌이 본격화될 것이다.

북풍사건과 통일전선부

한국대통령의 선거를 둘러싸고 국가안전기획부가 북한의 통일전선부의 당국자와 연락을 취하여 김대중 대통령을 낙선시키기 위한 공작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해졌다.

한국에서는 대통령선거나 총선거 때에 북한이 휴전선에서 총격전을 일으키거나 한국 내에서의 간첩공작이 적발되도록 하는 것을 ‘북풍’이라고 불러왔다. 대개의 경우 여당에 유리하게 사태가 진전되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김대중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공작을 했던 것을 안전기획부가 역으로 이용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즉 북한 공작기관에서는 어디까지나 김대중을 당선시킬 공작을 하였지만 한국 공작기관이 김대중 낙선작전에 이용하였다는 것이다.

‘북풍사건’이 북한 내부의 국가보위부와 통일전선부 간의 관계에 새로운 요소가 될 수 있다.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통일전선부의 관여를 부정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안전기획부의 공작을 그대로 방치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북한이 그러한 대응을 한다면 이는 현재의 체제붕괴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된다. 어쨌든 통일전선부와 국가보위부의 세력싸움 제2막이 시작된 것이다.

라. 누가 국제문제를 담당하는가?

일본과 한국은 통일전선부가 담당

현재까지 일본의 여당 방북단이 몇 차례 북한을 방문하였지만 대표단이나 정치가가 김영남 외교부장과 회담한 사실은 거의 없다. 이

는 지극히 기묘한 일이다. 만약 북한이 일본으로부터 쌀지원을 기대하고 또한 국교정상화 교섭을 재개하고자 한다면 정부의 책임자가 일본정부에 그 의향을 전하는 것이 통례이며 그래야 타결도 빠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언제나 김용순이 대신하였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당이 정부를 지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냉전종결과 사회주의 제국의 붕괴로 당이 정부를 지도하는 국가는 거의 없어졌다. 중국이나 베트남 등 아직 남아 있는 사회주의 국가는 그러한 제도를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정부나 외무성이 외교를 하고 있다. 이미 당의 지도는 형식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만이 대일 및 대남정책을 통일전선부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일·북간 외교의 혼란을 초래하는 최대의 원인이다. 다시 말해서 북한에서는 대일정책 또한 통일전선부의 공작대상이다.

통일전선부는 어디까지나 남북통일을 목표로 대남공작을 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 대남공작에서 대일공작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통일전선부가 대일외교를 담당하는 것이다.

미국은 외교부가 담당

그렇다면 왜 미국은 통일전선부가 담당하지 않는가?

미국도 당초에는 김용순이 담당하였지만 외교부에 넘겨준 것이다. 그 배경에는 외교부와 김용순 간의 격렬한 투쟁이 있었다. 당초 김용순이 미국을 방문하여 미·북관계를 타개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아 그가 대미담당이었다는 것은 틀림없다. 물론 당시에는 그가 노동당의 국제사업부장으로서 그러한 외교의 담당자이었다는 사실은 이해할 수 있다.

지금까지 북한의 외교영역에 있어 국교가 있는 사회주의 국가와의 외교는 외교부가 담당하고 국교가 없는 일본이나 미국에 대해서는 당이 담당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었다. 대미외교는 당이 담당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외교부가 담당하고 있다.

사실 김용순은 당초에 대미외교도 자신이 담당하려 했지만 외교부와의 세력싸움에서 패하여 넘겨준 것 같다.

왜 남북대화는 진전되지 않는가?

한편 남북간의 대화는 재개와 중단을 되풀이하고 있다. 북한은 김대중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남북대화가 진전되지 못한 이유는 간단하다. 한국은 북한의 자세변화를 유도하고 당국자에 의한 남북대화를 실현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남북대화에서는 이산가족 재회를 비롯하여 남북합의서의 재확인과 신뢰조성의 진전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의 기대를 고려한 대응이 문제인 것이다. 북한의 대남 대응이 기본적으로는 통일전선전략을 포기하고 있지 않다는 현실을 확실히 인식해야만 한다. 북한에게 있어 남북대화는 북한 주도의 통일실현을 위한 수단이며 남한 개방을 위한 것이다. 나아가 북한에 유리한 상황 조성이나 식량, 비료를 획득하는 것이 최대의 목적이다.

이 때문에 북한은 현재 판문점 등 한반도 내에서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이는 남북대화를 당분간 하고 싶지 않다는 의향일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식량난 해결과 경제회복을 하지 않고 남북대화에 응한다면 한국측에 약점을 보이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는 북한으로서는 김대중정부가 어디까지 북한의 기존 정책에 협력할 수 있는가를 시험하려 하고 있다. 북한의 남북대화에 대한 기본방침은

언제나 민간단체까지 포함한 ‘제정당, 단체연석회의’이다. 그 중에는 국회회담 등도 포함되지만 당국간의 회담만은 피하고 싶은 것이 일관된 전략이었다. 이러한 과거의 정책을 한 가지씩 제안하여 김대중 정부가 어디까지 양보하는가를 시험하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대화에 대한 본격적인 태도를 결정하려는 것이다.

남북대화가 지연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북한의 인사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총리나 정부 고위직이 공석이 되더라도 새로운 인사는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는다. 새로운 인사가 단행된다면 대남담당 비서나 간부도 바뀔 것이며, 새로운 대남정책이 취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당분간은 남북대화의 급진전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용순의 장래

김용순이 강제추방되었다는 몇 번의 정보가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 이유는 배후에 김정일의 여동생 김경희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당간부들 사이에서는 반(反)김용순감정이 팽배해 있다. 앞으로의 인사에서 김용순이 살아남을지 혹은 승진 또는 실격할지 여부는 일·북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평양 내부에서는 권력투쟁이 계속되고 있어서 일본은 이 투쟁이 끝날 때까지 지원을 삼가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내부투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김용순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일본이나 한국으로부터 대량의 식량지원을 얻어내고 납치의혹을 뒤로 미루어 일·북 국교정상화 교섭을 재개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정치가 이용하게 될

것이며, 일본의 정치가에게는 국교정상화 후의 이권이 약속될 것이다.

마. 맺는말

◇ 누가 일·북관계를 움직이고 있는가?

북한: 김용순, 황철, 허종만

일본: 野中廣務, 森喜郎, 中山正輝, 加藤紘一, 竹下登, 笹川陽平

◇ 북한의 대일전략

쌀의 도입이 최우선사항이고 다음으로 일북정상화 교섭

- ① 납치의혹을 소란스럽게 하지 않게 한다.
- ② 적군파를 귀국시킨다.
- ③ 자민당 정치가를 움직여 쌀지원과 정상화 교섭 재개를 도모한다.
- ④ 한국과 일본의 분열을 기도한다.
- ⑤ 일본의 매스컴과 학자를 북한의 지원세력으로 만든다.

◇ 일본의 대응

橋本정권 : 정부주도, 당을 압도한다.

御斑정권 : 野中 주도로 일북교섭 재개와 쌀지원을 외무성에 지시할 것인가?

2. 한반도의 안정적 시스템의 구축과 일본의 역할

가. 문제의 소재

북한의 장래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판단의 기준은 명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다. 학문적·전략적 접근으로부터 운동론이나 목적론까지 다양하다.

먼저 북한의 장래에 대해서 전쟁설, 붕괴설로부터 붕괴 및 전쟁부정설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석이 있다. 이러한 논의에는 ‘가능성’, ‘개연성’(蓋然性), ‘실현성’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다. 즉 붕괴의 구체적인 의미가 애매하다. 먼저 이러한 문제부터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구별 후에 ‘역사적·문화적 전통’, ‘통치체제’, ‘실행능력’, ‘체제의 목적’ 등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논의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일본의 대응에 대해서도 위협의 배제론으로부터 융화론까지 있는데, 이는 각 분야에서의 대응이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외교·정치·군사·경제·국제·전략적인 면에서의 대응논리가 검토되어야 한다. 대응논리를 모색할 때에는 북한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입수가 필요하다. 이러한 기초작업이 선행되지 않는 무모한 대응논리가 횡행하고 있는 바, 이를 정리하고자 한다.

나. 전략적 일·한관계의 구축

안정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자체의 안정적 시스템과 일본과 한반도의 안정적 시스템의 조성이라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

한반도의 안정적 시스템 구축은 ① 전쟁 재발 방지, ② 통일 달성시의 혼란 방지, ③ 일·한 전략관계의 구축이라는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

- 전쟁 재발 방지 : 먼저 주변 4대국이 한반도에서의 전쟁과 군사충돌을 방지하고, 용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동으로 선언하여야 한다. 둘째, '북한으로 하여금 남침정책을 포기하게 하고, 군비관리 및 군축교섭의 추진과 실현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 통일 달성시의 혼란 방지 : 국제적인 협력기구 설치와 한반도 통일기금 등의 조성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를 누가 제안할 것인가? 결국은 미국이 제안하는 것이 이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지 모른다.
- 일·한 전략관계 : 일본은 한반도 당사자 간의 자주적 통일을 지지하고 지원한다는 입장을 항상 표명하여야 한다. 나아가 한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일·한 양국의 신뢰관계의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일본과 한국은 '전략적 인접국 관계'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과 한국 양국은 상대국이 자국의 안전과 생존에는 불가결한 존재라는 이해와 '전략'을 공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양국민의 신뢰를 조성하고, 이를 육성하는 정책을 취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다. 북한의 장래(가능성, 개연성, 실현성)

A : 군사침공 = 북한군의 남침, 게릴라 공격, 한국요인 암살, 한국내의 혼란 조성

<검토사항> 전면적인 남침은 장비전력 면에서 가능한가? 전면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가? 북한군의 석유량은? 전쟁후의 국제사회의 반응은? 북한은 생존 가능한가? 한국 및 미군의 방위와 정보능력은 이를 사전에 저지할 수 있는가? 중국과 소련의 움직임, 군사위기를 저지할 수 있는 것은 외교이다.

가능성◎ 개연성▼ 실현성×

B : 쿠데타 = 군이 지탱하는 체제, 육·해·공, 호위총국, 보위부대, 공작부대

<검토사항> 쿠데타 방지책은? 과거의 쿠데타 사건은? 어떻게 하면 쿠데타가 가능한가? 군의 충성심은? 중국과 러시아는 쿠데타에 협력할 것인가?

가능성◎ 개연성▲ 실현성▼

C : 테러, 궁정혁명 = 김정일 암살, 김정일 배제

<검토사항> 누가 암살하며 누가 배제하는가? 반대세력은 존재하는가?

가능성◎ 개연성○ 실현성○

D : 인민봉기 = 평양에서의 학생운동, 시민폭동, 지방의 반란

<검토사항> 누가 폭동을 주도하는가? 주체사상을 부정하는 논리는 가능한가? 동학혁명에는 위정척사론이 있었다. 한국에서는 4.19혁명이 있었다. 중국의 영향은? 경제파탄의 가능성은?

가능성◎ 개연성▼ 실현성×

E : 유교와 주체사상 = 붕괴를 저지하는 정신적 지주이다. 이를 포기할 것인가? 변질시킬 것인가? 경제적 자유를 인정할 것인가? 중

국형 개방은 가능할 것인가? 주체사상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검토사항> 주체사상이란 무엇인가? 현실에 적용되고 있는가? 주체사상은 어느 정도까지 침투되어 있는가? 변질은 가능한가? 김정일사상과 적기(赤旗)사상이란?

가능성◎ 개연성▼ 실현성▼

F : 체제부패 = 지배체제의 부패와 군의 반발, 인사는 단행할 수 있는가? 뇌물수수과 돈의 지배, 아부와 업적

<검토사항> 부패는 김정일 타도에 직결될 것인가? 부패는 제거될 수 있는가? 인사의 세대교체와 대체는 가능한가?

가능성◎ 개연성○ 실현성○

G : 후계의 혼란 = 김정남(아들), 김경희(딸), 김평일(의붓동생), 친족 이외의 인물, 당관료 및 군간부

<검토사항> 김정일 사망후 어떻게 바뀔 것인가? 후계자 선출의 방법은?

가능성◎ 개연성△ 실현성△

H : 식량난 해소 = 식량이 없다는 것이 사실인가? 어느 정도 부족한가? 누가 지원하고 있는가? 식량난의 원인은?

<검토사항> 식량난은 해소할 수 있는가? 생산량은 증가시킬 수 있는가? 식량난을 해소하는 경우와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의 차이는? 중국은 언제까지 지원할 것인가? 일본은 지원하여야 하는가?

가능성▲ 개연성▼ 실현성▲

I : 북한경제 = 언제까지 지탱할 수 있는가? 구조적인 원인은? 북한경

제의 구조는? 개혁개방은 가능한가? 자본주의는 침투할 수 있는가?
<검토사항> 경제특구와 개방정책, 개혁과 주체사상

가능성◎ 개연성▲ 실현성▼

J : 북한에서의 군의 비중 = 군은 외교에 관여하는가? 군의 지도력은 강해지는가?

<검토사항> 왜 김정일은 군을 우선시 하는가? 군은 카터의 방북을 반대하는가? 납치는 군에서?

가능성◎ 개연성○ 실현성○

K : 붕괴한 북한은 중국에 구조를 요청한다 = 북한은 붕괴에 의한 통일을 싫어한다. 그보다는 중국의 일부가 되기를 바란다는 가설도 있다.

<검토사항> 북한을 둘러싼 쟁탈전은 발생할 것인가?

가능성◎ 개연성○ 실현성○

L : 북한의 일본공격 가능성 = 노동미사일은 있는가? 일본의 원자력 시설 등에 대한 게릴라 공격은 있는가? 공작원의 움직임 등은?

<검토사항> 일본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게릴라를 파견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 것인가? 북한은 세계의 적이 되며, 일본으로부터 돈을 끌어낼 수 없게 된다. 그러한 의도였다면 왜 지금까지 실행하지 않았는가? 미사일은 애매한 편이 위협에는 효과적이다.

가능성▼ 개연성× 실현성×

M : 대량의 난민이 일본에 올 것인가? = 일본으로부터 귀국한 조선인 약 10만명이 가족이나 친척을 데리고 일본에 올 것이라는 주

장. 난민이 수십만에서 수백만에 이를지 결론을 내릴 수 없다.
<검토사항> 북한에 간 한국인은 친척을 원망하고 있는가? 북한에 있는 사람은 일본인을 신뢰하고 있는가? 가장 불안하지 않은 도피 장소는 어디인가?

가능성▼ 개연성▼ 실현성▼

라. 통일정책의 전망

- 통일문제에 있어 조기통일이 가장 현실적이며, 통일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설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 조기통일을 달성할 경우, 한국이 비용부담을 견디기 힘들 것이라는 설이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조기통일은 한국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 통일될 때의 문제로서, 우선 북한에 의한 군사통일 및 흡수통일은 가까운 장래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통일된다고 할 때,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 ① 한국은 북한주민을 먹여 살려야 하지만, 한국의 경제위기 극복과 회복없는 어려운 일이다. 한국의 경제회복은 10년 소요될 것인가?
 - ② 배급제도가 기본이며, 화폐경제에 익숙치 못한 그들의 의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는가?
 - ③ 북한주민에게 남한의 사회와 경제시스템을 어떻게 이해시키며 교육시킬 것인가?
 - ④ 북한을 남한의 노예상태로 만들 수 있는가?
 - ⑤ 군의 해체와 당·정간부에 대한 대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 이렇게 볼 때 통일이란 꿈에서는 좋지만, 실현되는 과도기에서는 악몽과 지옥 같은 상황에 처하게 할 수도 있다. 베트남의 변화를

보더라도 후유증은 10년 정도 계속될 것이다. 독일의 경우는 막대한 자금을 부담하였다.

- 아무튼 통일 후의 문제는 다른 기회로 미루고, 통일 이전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처리해야만 하는 문제를 정리하고자 한다. 최근 각종 회의나 한반도문제를 연구하는 미국의 연구자들은 통일후 발생할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 왔다. 그러나 통일 이전과 그 과도기가 최대의 과제가 된다.
- 통일에 이르는 과도기에 일본의 한국과의 협력가능 여부와 한국민의 신뢰획득 여부가 장래의 일·한관계를 결정한다.

A : 통일의 조건 = 북한 붕괴, 북한체제 완화, 정치적 자유화, 대화에 의한 통일, 주변국의 중개, 중국의 변화, 한국의 경제회복, 일·북국교 정상화, 미·북국교정상화

<검토사항> 무엇이 통일에 장애인가? 통일정책은 어떻게 다른가, 남북교류는 실현되는가, 한국의 경제력은 통일에도 지탱될 수 있는가? 5년 이내인가? 10년 이내인가? 10년 이상인가?

B : 한국의 통일전략 = 교류확대, 북방정책, 동방정책? 북한 방치인가? 군사통일인가? 대북공작은?

<검토사항> 한국은 통일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북한의 현실을 파악하고 있는가? 바람직한 통일전략은 무엇인가?

C : 남북 신뢰조성 = 북한의 정책변화 없이는 어렵다. 북한의 통일정책 변화가능성은 있는가? 유일합법정권의 포기는? 대남공작의 중지, 편지의 교류, 이산가족 교류, 남북합의서 부활, 남북정상회담

<검토사항> 통일전선부의 답당은 변하는가? 한국은 대남공작으로서의 남북대화를 인내하여 왔다. 정부간의 교류를 한국은 주장할 수 있는가?

D : 군비관리 군축 = 군비관리 교류의 추진, 군축은 실현되는가? 연습의 상호통보는 가능한가? 상호관찰은 불가능할까?

<검토사항> 남북 군비관리군축에의 대응, 북은 주한미군 철수를 공식적으로 요구? 군비관리교섭으로의 준비는?

E : 남북교류 기금 = 남북교류기금의 활용은? 북은 응할 것인가? 주변국가들의 협력은?

<검토사항> KEDO 방식으로 농업문제까지 포함한 남북교류기금의 설치는 가능한가? 혹은 누가 남북통일기금의 제안자가 될 것인가?

F : 민간교류와 투자 = 한국은 65세 이상 노인의 왕래를 신고제로 하였고, 또 투자의 제한을 없었다.

<검토사항> 남이 변한다면 북도 변할 것인가? 남의 약체화는 위험하지 않는가?

G : 남북대화 = 북한은 통일전선노선, 교섭기술은 ① 최초 강하게 나온다. ② 교섭자에게 권한을 주지 않는다. ③ 최후까지 타협하지 않는다. ④ 타협 직전에 또 한 번 조건을 내세운다. ⑤ 결렬의 책임을 남측으로 밀어붙인다.

<검토사항> 북은 무엇을 위해서 남북대화를 하는가? 통일은 남북에게 동일한가? 북의 헌법과 대남정책의 주축은? 왜 공작원을 보내는가? 북의 해군과 공군의 구성은 게릴라 침투형

H : 북의 정책 목적 = 국제호지가 한국방식의 통일인가?

<검토사항> 각계의 연석회의와 국회회담, 당국회담을 왜 피하는가?

마. 일본의 선택

A : 일·북정상화 교섭 = 대남문제는 해결해야 하고, 미사일문제를 조건으로 하며, 정치가의 개입 배제, 김정일에게 일본의 의향을 전파, 일본은 교섭재개에 큰 조건을 붙여야만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외교카드에 대항할 수 없다. 북한의 수법을 이해한다.

<검토사항> 일본의 교섭자세, 협상 카드는 있는가? 북한의 내부사정을 알고 대응하는가? 평양내의 대립 구도

B : 식량원조는 해야만 할까 = 전략원조와 인도적 원조, 정부에 의한 지원을 받는다. 정치가와 당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

<검토사항> 식량원조를 해도 붕괴할 것인가? 식량원조를 해도 고마워하지 않는다. 원조의 투명성은 필요한가, 쌀지원의 시비, 창구에서 실력자를 통하라

C : 정상화 추진인가? 현상관망인가? = 조기정상화는 일본의 전략에 유리한가? 정상화해도 붕괴한다면 정상화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일본에 유리한 입장과 아시아 전략에서의 검토를, 일본이 아시아를 보살피는 듯한 인상과 이미지의 문제

<검토사항> 조기정상화와 후발정상화는 어느 쪽이 국익에 도움이 될까? 한국의 불신을 받더라도 정상화를 추구해야만 할까?

D : 정치가 개입 저지 = 정치가가 개입하면 이권문제가 발생한다.

한국과 북한과의 불신감이 커진다. 정치가는 개입하지 않고 통일
의 기반조성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을.

<검토사항> 외무성은 정치가의 개입을 배제할 수 없다.

E : 한반도전략 = 분단이 유리한가? 통일이 국익에 도움되는가? 어
떻게든 통일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전략, 통일한국이 일본을 신
뢰하고 동맹으로 발전하는 외교 필요.

<검토사항> 한국의 의향을 무시한 대북정책은 필요한가? 일본의 여
론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어떻게든 북한은 흡수통일되는가가 판
단의 분기점.

F : 전략적 한·일관계 = 한·일은 전략적인 관계라는 인식과 이념의
정착을. 한국은 일본과 협력이 가능한 나라이며, 한국과의 협력이
일본의 안전보장과 번영에 불가결하며, 한국도 또한 일본의
협력이 있다면 안전보장의 염려가 줄어든다.

<검토사항> 반일감정과 반한감정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G : 한·일간 무비자 관계를 = 한국인의 도향이 자유화된다면 한국의
감정은 변한다. 한·일간 셔틀편의 개설, 한국의 역사에 대한 교육

<검토사항> 한국인의 불법체류문제, 난민문제

H : 한국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 = 일본은 최대한의 협력을 명확하게
해야만 하고, 또 무언가 종합적인 대응책도 내놓아야 한다.

<검토사항> 한국을 취할 것인가, 북한을 취할 것인가의 선택을 해야
만 하고, 어느 쪽이 통일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가의 판단에 따른다.

바. 안정적 시스템의 구축-전쟁방지 시스템

- A : 주한미군 = 장기주둔이 바람직하다. 통일에 이르는 과정과 통일 후의 군사적 균형의 붕괴를 주한미군이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달성한다. 또한 일·한 간의 군사적 대립의 가능성 및 중국의 위협론도 약화시킬 수 있다. 한국으로서는 군사적 부담을 경감시키며, 군사적 충돌과 위협의 대두를 억지시킬 수 있다. 북한은 4자회담을 통해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하고 있지만, 본심은 전혀 상관하고 있지 않다. 협상 카드로서 이용하고 있다. 이미 1992년에 주한미군의 과도적인 주둔을 인정하였다.
- B : 전쟁 방지 = 일·미·중·러의 4대국은 정상간의 공동성명, 정상회담, APEC정상회의 등에서 한반도에서의 군사충돌을 방지하고, 간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 C : 군비관리 및 군축 = 한반도의 군비관리와 군축에 대해서, 한·미 양국과 연구 및 정책입안을 추진하여야 한다. 일·북정상화 및 미·북정상화의 조건으로 한반도의 군부관리 및 군축교섭을 조건으로 하여도 좋다. 한편으로 한국이나 일·미 양국도 북한을 군사 공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상시 표명하여야 한다.
- D : 남진통일의 포기 =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남진통일정책을 버리지 않고 있다. 소위 통일전선론에 기초한 정책이다. 남북관계를 긴장시키는 원인의 하나는 이러한 정책에 의한 공작원의 파견이나 공작기관의 존재에 있다. 북한에 대남 공작활동의 중지를 촉구한다.

- E : 남북합의서의 부활과 국제적 공인 = 1992년에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문서의 부활과 실행이 중요하다. 이 남북기본합의서를 일·미나 UN 등에서 국제적으로 공인하여 그 실행을 독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 F : 「한반도 평화협정」의 체결과 UN평화감시군 = 새로운 평화협정의 체결과 UN감시군에 의한 38도선 감시를 통해 휴전협정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 G : 남북정상회담 = 북한은 김정일이 결단하지 않으면 실행할 수 없는 체제이다. 이를 바꾸는 데는 정기적인 정상회담이 필요하다.
- H : 한·일·미의 북한 군사정보의 교환 및 감시체제의 조성 = 항시적인 북한군 동향의 감시.

사. 신뢰조성

- 신뢰조성의 어려움은 북한을 붕괴시킬 것인가, 존속시켜 자립시킬 것인가에 따라 목적이 변한다. 결국은 자립시켜 존속시키기 위한 지원이나 계획이 북한의 체제변혁을 가져와 붕괴를 앞당긴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무리한 통일보다는 북한이 자본주의 국가가 되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이해한 뒤에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북한의 가치관과 주체사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단기적으로는 우선 불가능하다. 이것이 바뀐다면 북한의 체제붕괴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최후까지 저항할 것이다.

- A : 북한의 자존심을 존중 = 사회주의와 체제존중, 상호간에 군사적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
- B : 각국 수뇌의 방문 유도 = 김정일에게 직접 진언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 국제사회의 현실과 경계를 가르친다.
- C : 동북아시아 수뇌회담 = 남북한과 일·미·중·러, 오스트리아 등이 의견교환의 장을 마련하여 김정일의 국제화를 도모한다.
- D : 납치, 대남공작원 파견을 비난하고 중지를 요구한다 = 이러한 조직과 체제가 있는 한 신뢰조성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의 폐지는 김정일 체제를 동요시킨다.
- E : 남북합의서의 부활 = 합의서를 확실한 실행에 옮긴다.
- F : 신뢰조성을 위한 관계6개국기구 = OSCE의 한반도판을 만든다.
- G : 「한반도통일 국제기금」에 의한 북한 경제지원 프로젝트 = 통계, 경제계획 수립의 지원 등
- H : 국제적 공동 프로젝트 추진 = 기술자, 의사, 시장경제 전문가의 양성, 한반도 종단 도로와 철도로 북경 및 유럽에.

아. 전략적 일·한관계의 구축

- 일·한관계의 문제는 서로가 상대를 필요로 하면서도 필요성을 말

할 수 없거나 느끼지 못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 상호간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상호협력이 필요하다. 국제사회에서 양국 모두 미국을 제외하면 동맹관계국이 없다. 일본의 안전보장 측면에서 한국은 북방의 위협을 저지하는 존재였다. 한국의 안전보장면에서는 일본이 후방의 지원기지가 된다.

- A : 비자없는 교류 = 미국 및 캐나다에 대한 대우처럼 관광여행하는 한국인을 비자없이 입국하게 한다.
- B : 의무교육으로 한국과 중국의 역사를 별도로 가르친다 = 주변국의 역사를 상식화하여 이해를 깊게 한다. 이러한 노력 없이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말해서는 안된다. 스스로가 먼 나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 C : 동경의 하네다(羽田)와 서울 간의 셔틀편을 개설하여 1시간에 1편씩 운행
- D : 일·한 양국의 영화와 TV방송을 방영 가능하게
- E : 군인보상금, 유족연금의 한국인에 대한 적용 = 일본인은 의리가 있으며, 과거에 일본에 협력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국가로서의 이미지가 중요하다.
- F : 일·한 양국의 여론주도층의 부문별 정기교류 = 논설위원, 경제전문가, 안전보장, NGO, 여당, 야당
- G : 대학교육의 빅뱅 = 일·한 양국 대학의 학술교류를 인정한다.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전망

박 종 철

(민족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문제제기

김대중정부는 햇볕정책으로 알려진 대북포용정책을 대북정책의 기초로 제시하였다. 대북포용정책은 정주영 명예회장의 북한방문과 남북합작사업 추진으로 가시화되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북한잠수정 침투사건은 남북관계의 이중적 현주소를 단적으로 드러냈다. 이처럼 한편으로는 교류·협력이 진행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긴장과 갈등요인이 여전히 존재하는 남북관계의 현실은 보다 종합적이고 신축적인 대북정책을 필요로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남북관계의 이중성을 감안한 토대위에서 먼저 남북관계를 둘러싼 국제적 환경과 남북한의 대내외 조건이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한반도문제의 국제화, 남한의 경제위기, 북한의 생존전략과 이중적 대남정책 등이 남북관계의 외적 조건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점검하고자 한다. 그 다음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을 기본적 접근방식과 정책추진방향의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

한 토대위에서 남북관계의 전망을 다자적 차원, 남북대화, 교류·협력, 대북지원과 이산가족문제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 국제환경과 남북한의 대내적 상황

가. 한반도문제의 국제화

남북한관계는 기본적으로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와 한반도문제의 국제화가 교차되는 상황에서 전개되어 왔다. 바꾸어 말하면, 남북관계의 교착상태와 돌파구는 국제환경의 변화와 남북한간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되어 왔다. 이것은 한반도분단과 남북한관계가 기본적으로 남북한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세계체제 및 동북아환경과 밀접한 상호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면, 남북관계의 돌파구는 항상 남북한 내부로부터보다는 국제환경의 변화에 의해 외부로부터 주어졌다. 남북한은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남북관계에 접근해 왔다고 할 수 있다.¹⁾

특히 1990년대 탈냉전후 여러 측면에서 한반도문제의 국제화가 두드러지게 진행되고 있다.

첫째, 북한핵문제는 한반도문제의 국제적 성격을 분명하게 입증했다. 북한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협상은 무위로 끝났으며,²⁾ 그

1) 1972년의 남북대화는 미·소태양트와 미·중국의 접근, 아시아문제의 아시아화를 천명한 닉슨독트린 등에 의해 야기된 국제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남북한의 대응노력의 소산이었다. 그리고 1992년 2월 남북기본합의서 및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의 채택도 사회주의권의 붕괴라고 하는 세계적 차원의 격변에 대한 남북한의 대응이었다.

2) 1992년 3월부터 1993년 1월까지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는 본회의 13회, 위원접촉 8회, 위원장 접촉 1회 등의 회의를 개최하여 남북상호사찰의 범위·방법·절차 등을 논의하였으나 북한내 군사시설의 임의사찰에 대한 북한의 거부로 합의에 실패하였다.

대신 국제원자력기구와 북한간 및 미·북협상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미·북 핵협상과정에서도 남한은 미국을 통한 간접적 통로로 밖에 참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미·북협상의 결과 남한은 대북경수로지원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남북한은 국제적 메카니즘 속에서 간접적 경로를 통해 협력하게 되었다.

둘째, 한반도평화정착을 위한 4자회담도 남북한관계의 국제적 측면을 분명하게 입증하고 있다. 남북한이 한반도평화정착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자간 구도를 통해서 평화체제 전환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현실은 한반도문제의 국제화 측면을 반영한 것이다.

셋째, 미·북기본합의서 이후 정치, 경제, 군사, 인도주의문제 등 다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북관계 진전과 일·북관계정상화 논의도 한반도문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변국은 북한의 급격한 변화가 초래할 위협요인을 염려하여 북한의 안정적 변화와 한반도현상유지를 위해 대북포용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주변국의 북한안정화정책은 북한에게 최소한의 생존공간을 마련해 주는 동시에 남한으로 하여금 대북포용정책을 채택하게 하는 외적 요인이 되고 있다.

넷째, 북한의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북지원과 관련하여 한반도문제의 국제화가 진행되고 있다. 북한은 경제난 해소를 위해 남한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기보다는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그 결과 세계식량기구(WFP)와 국제민간단체 등의 대북지원이 제공됨으로써 국제기구들이 한반도문제에 대해 관여하고 있다.

이처럼 한반도문제의 국제화는 한반도문제해결을 위해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지니고 있다. 우선 한반도문제의 국제화는 KEDO와 4자회담 등과 같이 한반도문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기 위

한 제도적 장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대북관계 진전도 북한의 안정적 변화와 북한의 국제사회 규범 준수를 위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한반도문제의 국제화는 한반도분단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남북한공존을 위한 외적 환경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문제의 국제화는 그만큼 남북한 당사자의 주도력을 제한하며, 특히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평가절하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다. 한반도문제의 국제화의 이중적 영향을 감안할 때,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서는 한반도문제의 국제화현상을 구조적 조건으로 받아들인 가운데, 이러한 조건 속에서 남북화해·협력을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남한 경제위기의 영향

남한의 경제위기도 대북정책에 있어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우선 남한의 경제위기는 대북협상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다. 김영삼정부의 대북정책은 남한이 북한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북한의 정치·군사적 양보를 받아낸다는 가정에 토대를 두고 있었다. 남한이 남북경협카드의 효과를 과대평가하여 정·경연계정책을 구사한 것이나 경수로건설사업에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경제력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그러나 남한의 경제위기는 대북협상력과 한반도문제와 관련한 국제사회에서의 협상력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경제위기로 인해 남한국민들이 대북지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지니게 된 것도 남북관계 진전에 있어서는 부정적이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았을 때, 남한의 경제위기는 긍정적인 측

면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남한의 경제위기는 남한이 경제적으로 북한을 흡수통일할 수도 있다는 근거 없는 자만심을 여지없이 무산시켰다. 남한의 이러한 자만심은 북한측의 거부감과 위협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었다. 그러나 남한의 경제위기로 인해 북한이 대남경제력 열세에 대한 열등의식을 어느 정도 완화하고 남북대화를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남한의 경제위기는 남북한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호혜적인 경제교류·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끔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남한의 사양산업을 북한에 이전하거나 북한에 조립공장을 건설함으로써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남한이 경제적 지렛대를 상실함으로써 비경제적 이슈인 군비통제 등에 좀더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는 점도 있다. 최근 남한에서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경제난 극복방안의 일환으로 군비통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³⁾

이처럼 남한의 경제적 위기는 대북우월감에 입각한 비현실적인 대북정책을 반성하고 좀더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입장에서 남북관계를 바라보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한의 경제위기는 남북한이 남북공존과 공생의 논리를 남북관계 진전에서 찾아야 한다는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

다. 북한의 생존전략과 남북관계

북한은 체제생존을 위해 대내적 차원에서는 과급효과가 제한된 범

3) “한반도 평화군축을 촉구하는 200인 선언,” 1998년 5월 21일; 이철기, “군사분야 통일정책에 대한 평가와 제안,” 경실련 통일협회, 「국민의 정부 100 일에 즈음한 통일정책 평가와 당면 실천과제 제안」 발표논문, 1998.5.

위에서 통제된 개혁을 실시하는 한편, 대외관계 개선 및 국제적 지원 획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북한은 대내적으로 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에 대한 투자유치·무역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절차 정비, 분조관리제의 도입을 통한 농업생산의 인센티브⁴⁾ 제공, 텃밭 허용, 농민시장 허용 등 제한적 개혁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부족한 식량을 충족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의 지원 획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체제보장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대미관계 개선 및 대일관계 개선 등 대외관계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통제된 개혁과 제한적 개방정책은 북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불충분하다. 그렇다고 북한이 단기간 내에 시장기구의 도입이나 협동농장의 해체,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과 같은 본격적인 개혁조치를 실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북한의 구조적 딜레마와 어려움은 장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북한의 딜레마는 대남관계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북한에게 있어서 남한은 궁극적으로 사회주의혁명과 통일의 대상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난 극복을 위해 지원과 협력을 요청해야 할 이중적 대상이다. 국력면에서 남한에 비해 열세에 처한 북한은 남한 주도의 흡수통일을 저지해야 하는 한편, 체제생존을 위해 남한으로부터 실리를 얻어야 하는 모순을 지니고 있다. 북한에게 있어서 적대적 남북관계는 한편으로는 대내적 통합을 위해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와 남한으로부터 지원 획득을 어렵게 한다.

한편 북한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남한의 권위주의정권과 보수적

4) 북한은 1996년 이후 협동농장에서 가족 및 친족 단위로 7~8명의 분조관리조를 구성하고, 목표량을 초과하는 생산물은 현물로 분조원에게 분배하여 자유롭게 처리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족통일연구원, 「통일환경과 남북한관계: 1997-1998」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p. 42.

대북정책에 대해 대응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였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남한의 권위주의정권이 외세의존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민중억압적이며 반통일적이라고 비난함으로써 대내적 통합을 달성하는 동시에 남한의 반체제세력들을 대상으로 통일전선전략을 수행할 수 있었다. 이와 동시에 정통성이 결여된 남한의 권위주의정권들이 남북관계 진전과 정상회담을 통해서 정통성을 보완하려고 하는 점을 이용하여 북한이 대남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점도 있었다.

김대중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해서 북한은 양면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남한으로부터 식량지원과 남북경협 이익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남북협력으로 인해서 파생될 부정적 파급효과를 차단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남북화해·협력의 분위기가 고조될 경우, 남북분단을 이유로 내뱉을 강조해 왔던 체제존립의 이유가 도전받는 상황도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당국간 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⁵⁾ 당국대화를 통한 남북관계의 제도화보다는 실질적 차원에서 민간분야의 경협과 사회문화분야의 제한적 교류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북한의 딜레마는 한편으로는 정주영 명예회장 일행의 판문점을 통한 방북과 경협논의를 받아들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잠수정침투 활동을 하는 현실에서 드러난다. 북한은 외화벌이와 원조 및 투자확보를 위해서 아태평화위원회를 중심으로 남한의 재계 및 종교·문화계 인사의 방북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안보관련 기구는 대

5) 북한은 1998년 4월 29일 “은 민족이 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라는 김정일 명의의 서한에서 이례적으로 “북과 남의 당국자들을 포함하여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 각계 각층 인사들과 인민들, 해외동포들이 광범위하게 참가하여야 하며 여러 가지 형태의 쌍무적 다무적인 대화와 협상을 적극 발전시켜야 합니다”라고 주장함으로써 당국간 대화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남정찰 및 첩보수집을 위한 침투작전을 여전히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이중성과 딜레마는 북한체제의 근본적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해결되기 힘든 문제다.

이러한 북한 생존전략의 이중성은 한편으로는 남북대화과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화해·협력을 제약하고 언제라도 남북관계를 경색시킬 수 있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라. 종합평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과 남북한의 대내적 상황은 남북화해·협력을 촉진하는 긍정적 측면과 동시에 이를 제약하는 부정적 측면을 지니고 있다. 어느 한 시점에서 이러한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을 산술적으로 종합평가하기는 힘들다.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은 산술적으로 상쇄될 수 있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동시에 존재하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더욱이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은 고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동태적으로 변화한다. 또한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을 목표로 설정하는냐에 따라서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의 효과는 달라지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그 자체로서 고정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다기보다는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는냐에 따라서 각 변수의 파장이 달라지게 된다. 즉 목표설정 여하에 따라서 동일한 변수가 긍정적 요인이 되기도 하고 부정적 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변수들을 목표달성을 위한 긍정적 요인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설정과 이를 운용하는 신축적인 전술이 필요하다.

남북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을 목표로 설정했을 경우 한반도의 국제적 환경과 남북한의 대내적 환경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반도의 국제화와 주변국의 남북공존 선호정책은 남북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국제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남한의 경제위기는 흡수통일의 비현실성과 남북공존의 현실적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이중성은 남북관계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나, 체제생존을 위한 남북협력의 필요성 자체가 남북관계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하는 요인이다. 따라서 이러한 긍정적인 요인들을 확대재생산하면서 이러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부정적 요인들의 과급효과를 줄여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3.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

김대중정부는 별도의 통일방안을 발표하는 대신 기존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묵시적으로 수용하면서 구체적인 정책목표와 원칙, 정책추진방향 등을 대북정책이라는 명칭하에 정리·발표하였다.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은 접근방식과 정책추진방향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가. 대북포용정책의 접근방식

김대중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크게 보면 다음과 같은 접근방식을 지니고 있다.

첫째, 대북포용정책은 교류·협력의 확대에 의해 남북한간 신뢰구축과 관계개선을 추구하는 기능주의적 시각을 수용하고 있지만, 동시에

정치·군사문제의 병행추진에도 초점을 두고 있다. 다만, 경제·사회분야의 교류·협력은 남북한 주도로 추진하고, 군사문제의 해결은 4자회담이라는 국제적 틀을 통해 해결한다는 이원적 접근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것은 교류·협력만을 우선시했던 기존의 기능주의적 시각과는 차이가 있지만, 정치·군사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부차적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신기능주의와는 약간 거리가 있다.

둘째, 대북포용정책은 기존의 단계적 통일방안을 암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김대중정부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같이 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통일국가단계로 통일과정을 구체화시키지는 않았다. 김대중은 민간인시절에 남북연합단계, 연방단계, 완전통일단계의 3단계통일방안을 제시하였지만⁶⁾, 대통령에 당선된 뒤 이러한 통일방안을 천명하지는 않았다. 그 대신 김대중정부는 남북한간 화해·협력과 「기본합의서」의 실천을 통해서 남북연합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것은 단계적 통일과정을 전제하되, 궁극적 목표로서의 통일보다 분단의 평화적 관리와 화해·협력을 우선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대중정부의 통일정책이 분단관리에 초점을 두고 통일국가의 달성과 통일미래상을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셋째, 대북포용정책은 북한을 정치적 실체로 인정하고 북한과의 공존을 모색한다. 기존의 통일방안도 이론적으로는 북한의 실체를 인

6) 김대중의 3단계통일방안중 연방단계에서는 외교와 국방, 주요 내정은 연방정부가 관장하고, 그밖의 일반적인 내정은 남북의 지역자치정부가 자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연방제는 사실상 통일국가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완전통일단계에서는 중앙집권제나 여러 개의 지역자치정부로 구성되는 미국이나 독일의 연방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되고 있다. 아태평화재단, 「김대중의 3단계통일론: 남북연합을 중심으로」 (서울: 아태평화출판사, 1995), pp. 34~44.

정하고 남북한공존과 북한의 점진적 변화에 의한 통일을 상정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난 심화로 북한붕괴론이 대두되면서 북한붕괴시 조기통일의 불가피성도 논의되었다. 그러나 김대중정부는 북한체제의 존속을 가정하고 북한을 흡수통일하지 않겠다는 것을 대북정책 3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이것은 대내외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북한 체제가 붕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판단하에,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한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중시하겠다는 것이다.

넷째, 대북포용정책은 분단상황의 관리와 북한의 변화유도를 위해서는 대북압박정책보다는 가능하고 상호실리적인 분야에서부터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실용주의적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것은 대북포용정책의 핵심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북포용정책은 대북봉쇄정책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 아무 기여도 하지 못했으며, 중·장기적으로 대북포용정책이 긴장완화와 화해·협력을 이끌어 내는 데 더욱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다섯째, 대북포용정책은 주변국의 대북안정화정책과 공조체제를 형성하는 한편, 한반도문제의 국제화현실을 수용한 바탕위에서 한반도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과거에는 한국의 대북정책이 주변국의 대북포용정책 및 한반도문제의 국제화현실과 어느 정도 마찰을 빚은 것이 사실이다. 김대중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국제사회의 대북정책과 동일한 노선을 택함으로써 그 동안 주변국과 빚어진 이견을 해소하였다.

나. 대북정책의 추진방향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의 구체적 특징은 정책추진방향에서 보다 분명하게 나타난다. 김대중정부는 정경연계, 창구일원화 등 남한의

대북정책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들을 전향적인 시각에서 수정하였다.

첫째, 대북정책 추진방향의 중요한 특징은 정경분리원칙이다. 과거 한국정부는 정경연계정책에 입각하여 대북경협조치를 전반적인 남북관계의 진전과 연계하였다. 이러한 원칙하에 대북경협의 절차와 투자상한 등을 정부가 통제하였다. 정경연계정책은 북한핵문제로 인해서 한반도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경제분야에서만 교류·협력을 허용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 점도 있었다. 그러나 정경연계정책은 실제적으로 북한의 양보를 얻어내는 데 아무 효과도 없었으며, 정부통제에 대한 남한기업들의 불만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었다.

정경분리원칙은 남북관계에서 정치·군사적 사안과 경제교류·협력을 연계시키지 않고, 대북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이 남북경협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치·군사적 긴장상태를 인정한 현실위에서 실질적으로 가능한 경협분야에서 호혜적 관계를 형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경분리원칙은 구체적으로 남북경협에서 정부와 민간이 어떻게 역할을 분담해야 하며, 실제상황에서 정치·군사적 사안과 경협을 어느 수준에서 분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쟁점을 안고 있다.

둘째, 정부차원의 대북지원 및 협력은 상호주의원칙에 입각하여 추진한다는 것이다. 정부차원의 대북식량지원과 농업개발지원 및 협력 등에는 정부예산이 소요되며,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정치적 사안

7) 정경분리원칙과 관련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분담과 남북경협활성화 방침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기 바람. 이종석, “정경분리의 여건조성과 정책활제”; 이상만,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과 대북접근자세”; 김도경, “정경분리하에서의 남북한 교류·협력 실천가능분야,” 민족통일연구원·통일경제연구협회·한국경제신문사 공동주최 학술회의, 「대북정경분리정책: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1998.4.10)

이기 때문에 북한의 상응하는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남북당국간 대화가 부재하고 정치·군사적 대립이 존속하는 상황에서 정부차원의 대북지원 및 협력을 무조건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남북관계에서 상호주의는 매 사안별로 등가성의 원칙에 입각한 엄격한 상호주의라기보다는 상호 납득할만한 수준의 신축적 상호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어떤 종류의 대북지원 및 협력을 북한의 어떤 양보조치와 연계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필요로 한다.

셋째, 김대중정부는 민간차원의 대북접촉을 확대 허용함으로써 창구다원화를 실시하였다. 과거 한국정부는 대북접촉창구를 정부로 일원화하였다. 이것은 남한내 통일관련단체들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다양한 현실을 고려하는 한편, 북한이 통일전선전술 차원에서 남한내 진보세력과 연합전선을 형성하려 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김대중정부는 남한의 정치경제적 우위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하는 한편, 가능한 한 다양한 통로를 통한 북한과의 접촉을 통해 남북화해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접촉을 통한 변화' 방침에 입각하여 개인 및 민간단체의 대북접촉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김대중정부가 8·15통일대축전에 대비하여 한총련과 범민련을 제외한 59개 정당·사회단체와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민화협)」를 결성한 것도 이러한 방침에 의한 것이다. 아울러 경협활성화를 위해서 반관반민기구의 결성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시되는 것도 이러한 방침을 고려한 것이다.

4. 남북관계의 전망

가. 다자적 차원

남북문제는 일차적으로 당사자인 남북한 양자간 대화와 협력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남북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다자주의(multilateralism)는 양자주의(bilateralism)에 비해서 몇 가지 장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 다자주의는 남북한 당사자의 불신과 대립을 완화내지 중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남북한이 다자적 틀 속에서 협상을 진행함으로써 남북한만이 협상함으로써 발생하는 긴장과 대결의식이 완화될 수 있다. 그리고 다자주의는 협상의 이익과 불이익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의 역할을 한다. 또한 다자주의는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자원과 경제적 자원을 제공한다. 그리고 다자주의는 참여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원칙과 규범, 규칙 및 절차 등을 정착시키고 새로운 레짐⁸⁾을 형성함으로써 다른 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남북관계에서 성공적인 다자접근방식으로는 KEDO를 들 수 있으며, 4자회담은 안보관련 다자주의의 한 예이다. 앞으로 경협과 농업협력 등의 분야에서 다자주의모델이 실험될 가능성도 있다.

8) 레짐이론은 국제관계에서 다양한 동태적인 갈등과 협력양상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이며, 레짐은 “국제관계의 일정한 영역에서 행위자의 기대가 수렴되는 명시적 혹은 묵시적 원칙, 규범, 규칙과 의사결정과정이다”. Stephen D. Krasner, “Structural Causes and Regime Consequence: Regimes as Intervening Variables,” in Stephen D. Krasner, ed., *International Regim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p. 3

(1) 경수로건설사업

남북관계에서 다자주의의 성공적인 사례는 KEDO의 경수로건설사업이다. 경수로건설사업은 1994년 10월 미국과 북한 간에 체결된 제네바기본합의문에 따라 북한의 핵동결 대가로 북한에게 1,000MW 경수로 2기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수로건설을 담당하는 KEDO는 국제컨소시엄으로 미국과 한국, 일본, EU가 주요 구성국이다. 경수로건설사업은 현재까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1995년 12월 KEDO와 북한간 경수로공급협정이 체결되었으며 이후 6개의 후속의정서⁹⁾가 체결되었고, 1997년 8월부터 신포에서 부지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약 150명의 남한측 관리자 및 기술자와 약 130명의 북한측 노동자가 부지건설작업장에서 협력하고 있다.

경수로건설사업은 남북한이 다자적 틀 속에서 실질적으로 협상하고 협력하는 시범적 사례이다. KEDO와 북한측의 협상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남한과 북한이 공식·비공식 통로를 통해서 절충을 벌였으며, 금호지구의 사업현장에서도 남한과 북한이 실질적으로 사업진행에 대해서 협력하고 있다.

그리고 경수로건설의 쟁점이었던 비용분담문제는 1998년 7월 말 개최된 KEDO집행이사회에서 한국이 70%의 비용을 부담하고 일본이 10억 달러를 부담하며, 나머지는 미국이 다른 나라의 지원을 확보한다는 내용으로 합의되었다.¹⁰⁾ 그러나 미국은 매년 약 50만톤에 이

9) 현재까지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의정서」, 「통행의정서」, 「통신의정서」, 「부지인수의정서」, 「서비스이용의정서」, 「채무불이행시 조치의정서」 등이 체결되었으며, 앞으로 「품질보장」, 「훈련프로그램」, 「인도일정과 북한측 의무사항 이행」, 「경수로가격조건」, 「안전점검」, 「핵사고시 처리」, 「사용후연료봉 처리」 등 추가의정서가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10) 「서울신문」, 1998.7.30.

르는 중유비용을 담당하는 대신¹¹⁾ 경수로건설비용은 낼 수 없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잔여부문의 자금확보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2) 평화체제 전환과 4자회담

한반도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4자회담도 다자적 접근방식에 의해 한반도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이다. 4자회담은 남북한이 평화체제 전환에 대해 협상하고 이것을 미국과 중국이 보장하는 다자적 접근 방식이다. 4자회담은 정치·군사분야에서 한반도문제의 국제적 측면과 남북한당자사 원칙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중대한 실험 케이스이다.

4자회담의 최대쟁점은 의제와 관련국의 역할분담문제이다. 1997년 12월과 1998년 3월 두 차례 개최된 4자회담에서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와 미·북평화협정 체결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자회담이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한반도평화체제는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평화협정의 체결, 보장장치의 마련, 합의이행에 대한 검증장치의 마련 등을 포함하는 북

11) 매년 50만톤의 중유공급을 위해서 6,000~6,500만 달러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중유구입용 KEDO 기여금 부족으로 1995~97년간 4,400만 달러 이상의 누적적자가 발생하였다. 미국은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1,000만 달러의 중유부채 청산용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한편, ASEAN, 중동 산유국 등에 대해 중유비용 제공을 요청하고 있다. 외무부, 「한반도문제 주요 현안 자료집」 (서울: 외무부, 1998), p. 28.

잡한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제를 조정하는 문제와 남북한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문제, 미국과 중국의 보장자 역할의 성격 등이 쟁점사항이 될 것이다. 아울러 4차회담에 의해 한반도평화체제 전환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6차회담을 통해서 일본과 러시아의 보장을 받는 방안과 동북아다자안보협력체를 통해 국제적 보장을 받는 방안들이 검토될 것이다.

(3) 국제컨소시엄을 통한 남북경협

앞으로 국제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남북한 경협방안이 논의될 수도 있다. 국제컨소시엄은 남북경협에 소요되는 재원을 국제사회로부터 동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에 대한 국제적 보장, 분쟁발생시 국제규범에 의한 분쟁조정 용이 등과 같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UNDP 주관하의 두만강개발사업 이외에도 환동해권개발, 환황해권개발 등 다자경제협력의 틀 속에서 남북한경제협력이 추진될 수 있다.

또한 화력발전소 건설을 비롯한 에너지협력사업이나 통신, 교통, 정보 등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사업에 있어서도 국제컨소시엄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IMF, IBRD, ADB 등 국제금융기구에 북한이 가입하는 것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다자간 경협구조에 남북한이 참여하는 방법도 있다. 아울러 일·북수교로 인해 일본의 보상금이 개발차관 형태로 북한에 제공될 경우, 이와 관련하여 국제컨소시엄 형태로 남북경제협력이 추진될 수도 있다.

또한 북한의 농업문제 해결을 위한 농지복구, 수리개발, 산림녹화, 집단농장의 시장경제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의 주도하에 미국, 일본, 중국, EU 등이 참여하는 「한반도농업개발기구(가칭)」(Korean

Agricultural Development Organization)가 결성될 경우, 이것도 다자주의의 한 유형에 속할 것이다.

나. 남북한 당국간대화

남북한은 1992년에 기본합의서를 체결하였으나 상호불신과 대립적 구도 때문에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북한핵문제 대두 이후 남북대화는 전면 중지되었으며, 핵협상과정에서 특사교환협이나 1995년 쌀협상, 1998년 비료지원협상 등과 같이 특정이슈에 관한 회담만이 간헐적으로 개최되었다.

지난 4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남북한 차관급회담은 김대중정부가 등장한 이후 최초의 남북회담이라는 점에서 대내외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베이징 차관급회담은 남북대화에 관한 남북한의 기본입장 차이만을 확인하는 것으로 끝났다. 북한은 아무 조건없는 비료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이 회담을 비료지원이라는 특정사안에 관련된 일회성 회담으로 여겼다. 반면 한국은 상호주의원칙에 입각하여 비료지원과 이산가족문제를 연계하였으며, 이 회담을 일회성회담보다는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디딤돌로 삼고자 하였다.

앞으로 비료지원이나 종자·농기구·농약 등 농업지원에 관한 특정회담이 당국간 개최될 수 있다. 이러한 회담이 해당 분야에서 협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이런 협력이 단기간 내에 다른 분야로 확산되거나 이것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전면적으로 정상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힘들다.

남북대화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은 남북간에 구성된 각급 분과위원회와 공동위원회를 전면 가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남북기구의 전면가동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남북대화가 공

식 가동되기 이전 단계에서 민간차원의 대북협상창구나 KOTRA 등 반관반민단체를 통해 접촉통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김대중대통령은 지난 8·15경축사에서 북한에게 남북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특사교환과 장·차관급으로 구성되는 남북상설대화기구의 구성을 제안하였다. 특사교환은 남북한간 우선적 현안인 이산가족문제, 남북경협 활성화,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방안 등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남북상설대화기구는 농업협력, 에너지협력, 환경협력 등 각 분야별로 실질적 협력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남북정상회담이 남북관계의 질적 변화를 위한 한 계기가 될 수 있다. 1970년 서독의 브란트수상이 동독을 방문하여 당시 스토프 동독수상과 제1차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수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이 체결되었다. 남북한의 경우에도 주요 현안타결과 국면전환을 위해서 남북한 최고지도자의 정치적 결단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남북한의 정치·군사적 갈등을 감안할 때 남북정상회담은 교착상태를 극복하고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더욱이 남북한은 이미 김일성 사망전 남북정상회담의 세부절차에 대해서는 합의한 상태이다. 다만 남북정상회담의 정치적 효과를 의식하여 정상회담의 개최 자체에 대해 높은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 교류협력

경제·사회분야의 교류·협력은 남북한에게 상호이익이 되고 남북한의 이질감 해소와 북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시되어 왔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이 교류·협력을 강조할수록 그 부정적 파급

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북한은 교류·협력을 통한 실리적 이익을 기대하면서도 그 파급효과를 철저하게 차단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의 대화에는 부정적이다. 그 대신 북한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남한의 교류·협력대상자들을 선별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렛대를 확보하고 이들간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1) 경제교류·협력

남북경제교류는 1988년 이후 증가하여 1997년 말 현재 남북교역은 약 3억 달러에 이르렀다. 특히 위탁가공교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교역내용을 보면, 반입품목 가운데 철강·금속제품·광산물이 반입총액의 약 51%이며, 위탁가공을 통해 반입된 섬유류가 약 25%를 차지하였다. 반출품목으로는 위탁가공용 섬유원부자재가 총액의 약 34%이며, 화학제품이 약 27%이다. 남북한의 물자교역은 남한이 북한에서 원자재를 들여오는 대신 반제품과 공업제품을 북한으로 반출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¹²⁾

정경분리원칙에 따라 한국정부는 4월말 대북투자절차의 간소화, 투자상한선 확대, 투자금지업종의 네거티브 리스트¹³⁾ 작성, 반출품목의 확대 등 경협활성화조치를 발표했다. 정주영 명예회장의 방북과 관광산업·자동차산업·선박산업 등에 대한 투자협의를 이러한 경협활성화조치에 힘입은 것이다. 잠수정침투사건으로 인해 대북경협의 속도와 범위가 어느 정도 조절되었지만 대북포용정책의 기초가 유지되는 한, 각 분야에서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2) 통일원 교류협력국, 「남북교류협력동향」, 1997.12.

13) 대북투자 제한분야는 「대의무역법」에 규정된 전략적으로 기술이전이 곤란한 분야와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방산물자 관련 산업분야이다.

(2)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은 정치사회적 파급효과를 지니고 있는 민감한 분야이다. 남한은 다양한 분야의 사회문화적 접촉을 통해 북한에게 외부세계의 변화를 알리고 사회 밑바닥으로부터 북한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은 이와 동시에 남한의 진보세력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대한 우려감을 아직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북한도 한편으로는 남한의 진보세력과의 연대를 희망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한주민의 접촉을 차단해야 하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이러한 남북한의 이중적 고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정부가 사회문화분야의 대북접촉을 확대함으로써 예술계, 종교계, 학계 등을 중심으로 인적 교류가 활발해졌다. 북한은 민간차원의 접촉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나 반대급부를 획득하기 위해서 선별적으로 방북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남북한의 의도가 맞아 떨어져서 리틀엔젤스의 평양공연, 성균관대학교 총장의 방북, 종교인의 방북 등이 성사되었다. 아울러 연변과기대의 나진·선봉지역 과기대 설립, 한민족복지재단의 나진·선봉지역 병원 건립 등 협력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 확대는 북한과의 접촉창구 다원화와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사회문화분야의 접촉 확대 정책은 8·15통일대축전과 관련하여 시험대에 올랐다. 남한은 통일관련 연합단체인 「민화협」과 북측 상대편이 8·15통일대축전을 개최하기 위해 실무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의 한총련 및 범민련과 회담을 하겠다고 주장함으로써 남북한 공동 주최의 8·15행사는 무산되었다. 이것은 정치적 색채를 띤 사회문화의 남북접촉을 위해서는 아직도 건너야 할 걸림돌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입증하였다.

라. 대북지원과 이산가족문제

(1) 대북지원과 농업협력

북한의 식량난 악화로 북한이 국제사회에 대해 지원을 요청한 후 한국은 세 가지 차원에서 대북지원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첫째는 인도적 차원의 긴급지원 제공이다. 한국은 정부차원에서 세계식량기구(WFP)를 통해 국제적 차원의 식량지원에 동참하는 한편, 국내에서는 대한적십자사로 창구를 일원화하여 대북지원을 해왔다.¹⁴⁾ 김대중정부는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창구를 다원화하여 적십자사를 통하지 않고도 대북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남한은 북한식량난이 천연재해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라기보다는 북한농업의 구조적 문제로부터 기인한다는 인식하에 농업지원 및 농업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종자·비료·농기구 등 농업지원과 농업협력개발기금 제공, 농사기술 이전, 계약재배 등 농업협력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두레마을에 의한 씨감자 계약재배는 농업협력의 한 유형이다. 그런데 한국은 정부차원의 농업지원 및 농업협력은 유상상환의 원칙과 북한의 상응하는 정책적 호응을 전제로 한다는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셋째는 북한이 부족한 식량을 해외에서 수입할 수 있도록 외화획득을 위해 경협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4) 한국은 1995년 6월부터 1997년 말까지 국제기구 및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총 2억 8,676달러에 상당하는 대북지원을 제공하였다. 민족통일연구원, 「통일환경과 남북한관계: 1997-1998」, p. 78~79.

(2) 이산가족문제

이산가족문제는 민족분단이 가져온 대표적인 인간적 고통이며 이산가족 1세대의 고령화로 인해 시급한 해결책을 필요로 한다. 남한은 대북지원과 이산가족면회소 설치를 연계하여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이산가족 상봉의 파급효과를 우려한 북한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차원의 이산가족문제 해결이 힘든 상황을 감안하여 종교단체나 민간단체가 이산가족의 서신왕래 및 재회를 주선하는 방안도 모색될 수 있다. 또한 이산가족의 상봉에 앞서 생사확인파 서신왕래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와 같이 중국 등 제3국에서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방법 외에 북한의 나진·선봉지역이나 금강산지역 등 특정지역의 관광과 연계하여 이산가족 상봉을 주선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5. 맺음말

한반도문제의 해결방안은 국제적 차원의 조건과 남북한 내부의 조건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마련될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대내외 상황을 감안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한반도문제가 내포하고 있는 관계의 중층성을 고려하여 동북아차원과 한반도차원, 남북관계차원의 정책적 고려가 종합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아울러 외교정책과 안보정책, 통일정책이 종합적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남북한관계에는 정치, 군사, 경제, 사회문화, 환경 등 다차원적인 이슈들이 관련되어 있다. 정치·군사분야의 전통적 이슈들이 여전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와 함께 경제·사회문화분야

이슈들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슈들의 상호관계와 우선 순위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한편 남북관계가 진전될수록 갈등과 협력이 병존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관계가 단절되어 있었을 때는 갈등표출이 제한적이고 협력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남북한간 협력이 진전되면서 잠재되어있던 갈등이 표출되고 협력과정에서 이견이 드러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¹⁵⁾

남북대화가 단절되어 있던 기간에는 긴장요인이나 북한의 대남도발에 대한 대응책이 비교적 단순하였다. 그러나 남북교류·협력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긴장요인이 발생할 경우, 종합적이고 세련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1998년 잠수정침투사건에 대한 대응이 1996년 강릉 잠수함침투사건에 대한 대응보다 복잡한 것은 바로 한편에서 교류·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복잡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남북화해·협력의 진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적 긴장요인을 최소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대화·협력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분단관리방안과 세부적인 위기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15) 남북한간 상호작용에 대한 event data분석에 의하면 갈등의 정도와 협력의 정도는 정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낮은 수준의 갈등과 낮은 수준의 협력이 공존하고, 높은 수준의 갈등과 높은 수준의 협력이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철, 「북한과 주변 4국 및 남한간 갈등·협력관계 1984-1997: Event Data 분석기법 활용」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pp. 73~85.

<토론>

사회: 먼저 김영춘·이교덕 박사께서 토론해 주시고, 다음으로 다케사다 선생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박사: 시게무라 선생은 일·북 국교정상화 전망을 하기 위해서 북한의 대일전략과 일본의 인맥이라는 시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시게무라 선생의 논문은 통일전선부·국가보위부·외교부의 전략과 특성, 특히 김용순의 대일외교 행각, 일본의 자민당 등 실력자와 조총련과의 관계 등 생생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기자가 아니면 쓰기 힘든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관계상 논평은 생략하고 몇 개의 질문을 드리하고자 합니다. 최근 외상 경력을 가진 오부치 총리가 취임하였는데, 일본은 하시모토 총리 시절에는 러시아의 관계개선을 위하여 유라시아외교를 표방하였고, 중·북 및 러·북 관계 회복 그리고 4자회담 등 한반도를 둘러싼 움직임에서 소외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북한과의 관계개선,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의 확보를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시게무라 선생이 지적하는 일본인 납치사건은 일본국민과 자민당내 우파를 설득하는 것이 문제입니다만, 이 문제는 북한의 유연한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협상의 큰 걸림돌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한 시게무라 선생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일·북 국교정상화에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본인 납치문제, 과거사보상문제, 미사일문제 등 여러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만 국제정치적 시각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변수는 미·북 관계일 것입니다. 미·북관계가 해소되면 일·북관계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일본은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문제를 관망하면서 일·북 연락사무소 설치를 고려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북한은 주지하다시피 참담한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은 수교 전이라도 일본의 대북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선(先) 수교 후(後) 현안 문제 해결이라는 방식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계무라 선생께서도 납치문제를 맨 마지막으로 돌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교덕 박사: 먼저 시계무라 선생의 논문을 접하면서 갖게 된 느낌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구자가 한 국가의 외교정책 결정과정이나 대외관계를 분석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접근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대개 사회주의 국가를 분석대상으로 할 때에는 국제체제 수준의 분석이 주류이고, 따라서 거시적인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 국가의 외교정책 결정과정에는 국제체제라는 거시적인 요인이나 국가이익이란 합리적인 요인에 의해서만 지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다양한 분석수준에서 여러 가지 비합리적인 요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됩니다.

일본과 같은 다원적인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수집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정책결정자들의 개성이나 성격이 어떤 특정한 정책결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 특히 북한의 경우 자료나 정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계무라 선생께서는 대일관계를 전담하고 있는 김용순의

개성, 북한 국가기구 간의 알력·마찰, 관료정치가 대외관계에 미치는 파장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석수준으로 보면 상당히 미시적이고, 또 이를 통해서 북한의 대외관계나 대일접촉이 북한의 국가이익이나 정책목표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비합리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방법 때문에 일·북관계의 전망에 있어 김용순의 거취, 김정일의 인사개편 내용에 상당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게무라 선생께서 일본학자들이 치밀함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일본학자들의 미시적인 접근방법 때문에 치밀함이 돋보입니다. 특히 시게무라 선생께서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정보를 말씀해주신 것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러한 정보원이 매우 궁금합니다.

저는 미시적인 접근방법을 보완하는 선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일·북 수교 성사와 관련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제적인 조건으로 미국과 한국의 양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의 동향이 매우 중요한데 북한도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995년도 수교회담을 재개한다는 합의문에서 앞으로 회담이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입장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둘째는 양국 국내의 사정인데 양국의 입장에서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마지막은 합의된 의제의 타결로서 특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납치의혹문제인데, 이는 1990, 91년 수교회담에서 이미 거론되었고, 그 때 일본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므로 실무협상에 다룰 수 있다고 양보를 한 바 있습니다.

일본이 이 문제를 계속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국교정상화 교섭을 재개할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납치의혹 해소라는 것은 북한이 절대 받을 수 없는 카드인데, 북한이 받을 수 없는 카드를 내미는 것은 교섭을 재개할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 일본정부는 현재 북한정세의 불투명, 김정일정권 장래의 불확실성 속에서 북한과의 국교정상화 회담이 일본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다케사다: 박종철박사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4자회담이 한국정부의 햇볕정책에 이익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4자회담은 초기와는 달리 성격이 변한 것 같습니다. 중국은 역할을 증대하면서 참여하려 하고 있고, 미국과 북한은 미·북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참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햇볕정책과 관련지어 역할을 증대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둘째, 김영삼정부와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김대중정부에 들어 남북관계와 한미관계의 모순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김정일의 주석취임 여부와 남북정상회담의 가능성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김정일이 주석에 취임하지 않는다고 해도 남북정상회담이 모색될 수 있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사 회: 일본의 미시적이고 귀납적인 연구와 한국의 거시적이고 이론적인 연구가 상호보완된다면 북한문제 및 한반도문제 그리고 동북아문제를 분석하는 데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게무라 선생과 박종철 박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게무라: 일·북 간의 수교문제에 있어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답

변입니다. 우선 일본의 정치상황이나 일본사회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것으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전 교섭 당시 이은혜문제로 정상화 교섭이 중단되었습니다만, 당시 사회당이 강력한 세력으로 자리잡고 있었고, 북한에 대한 인식도 지금처럼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일본정계에는 북한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정당이나 세력이 없어져 버렸고, 북한에 대한 인식 또한 아주 나빠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납치문제가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일본인 납치문제가 일·북 정상화 교섭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이는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문제가 진전되면 일본측에서도 서둘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납치문제를 나중으로 돌려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지 않고 직접 정상화의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연락사무소를 만들면 미국의 CIA나 정보원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결국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일·북교섭의 급진전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다음으로 수교문제와 관련해서 과거사문제, 미사일문제, 안보문제 등이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본정부는 미사일문제를 크게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사일문제는 현재에는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지만 북한의 노동미사일이 완성되어 배치되는 것이 확인되면 아주 시끄러워질 것이다.

북한과의 과거사문제를 한국과 똑같은 수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일본의 기본입장이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전후배상문제입니다. 즉 북한은 일본이 한국과 먼저 수교하여 북한에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네마루가 방북하였을 당시에는 이 문제에 대해 합의하였지만, 현재는 전후배상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1992년 교섭 당

시의 이슈가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새로운 이슈가 등장하지 않는 한 그대로 협상한다는 것이 일본의 입장입니다.

김영춘 박사: 평양의 권력투쟁에서 김용순의 퇴출 가능성을 전망하셨는데, 앞으로 어떤 인물이 일·북관계의 실력자로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계무라: 일본에서는 김용순의 거취, 즉 김용순이 통일전선부에서 다른 부서로 전보되는지, 일본 담당자가 교체되는지에 대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원로들은 김용순의 대일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순이 그간 일본으로부터의 쌀 100만톤의 지원 확보, 조속한 일·북교섭 재개를 확인하였으나 실현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최근 실권을 잃은 조총련 허종만도 대일정책과 관련이 있고, 김용순 주변사람들의 거취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김용순은 기분이 좋은 모양입니다. 김용순 스스로가 다음에 김영남 자리에 가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였고, 김용순이 다음에 정무원 총리로 등용될 것이라는 소식도 들립니다. 김용순은 김달현이 탈락한 덕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순 대신 대일관계를 담당할 간부로는 순서대로라면 당 국제부장인 김양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측면에서 일·북관계의 개선을 모색한다면 경제 담당자가 일본을 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있습니다.

사 회: 시계무라 선생의 말씀처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일본창구를 통일전선부의 강주일가 맡았습니다. 따라서 강주

일이 다시 통일전선부로 와서 맡을 가능성은 없는지, 북·일 간의 수교 교섭이 재개된다면 일본이 원하는 방식대로 일본 외무성과 북한 외교부 간에 이루어지지 않을지. 그러면 국제부의 김양곤이 그 일을 맡기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시게무라 선생은 외교부에서 맡는다면 김용순이 외교부장으로 동용될 가능성 말씀하셨는데, 김용순이 외교부에 가서도 대일창구를 맡지 않을지. 제 생각에는 당에서 맡는다면 김양곤보다도 과거부터 대일창구를 장악해 왔던 강관주가 다시 그 자리로 가고, 정무원에서 맡는다면 김용순이 외교부장으로 가서 그 일을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게무라: 김용순이 외교부장이 되면 대일창구를 맡을 것입니다. 강관주는 대일담당을 해왔지만 기본적인 업무는 조총련에서 자금을 모집하는 일이었습니다. 강관주 스스로는 비서로 동용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용순의 거취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배충남 사무관: 일·북 국교정상화 과정은 현재 명분론 때문에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게무라 선생은 하시모토 정권이 협상테이블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었다면 지금은 출구쪽에 있다고 보아도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복합적인 관계개선을 위한 동향을 종합해서 향후 전망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국에서는 대체적으로 ‘선 북·미수교 후 북·일수교’를 논의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가능하다면 현안을 물어두고 북·일수교의 타결이 모색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게무라: 입구에서 출구로 가야 된다는 것은 제 주장이 아니라 일본 내에서 나온 의견이고, 대표적인 사람은 노나카입니다. 현재 오부

치정권은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문제 많은 대북관계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기 어렵습니다.

일·북수교가 미·북수교보다 먼저 추진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 제가 KEDO를 담당하는 북한의 허정희와 자주 만나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허정희는 북한 내에서 '미국파'와 '일본파'가 계속 논쟁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미국파는 일본이 미국이 움직이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미국과 먼저 수교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일본파는 일본이 미국과 싸울 만큼 힘있는 나라이므로 일본과 먼저 수교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일본파가 강해지면서 가네마루를 초청하여 수교를 먼저 추진하였으나 핵문제가 터지면서 역시 일본은 미국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나라라고 해서 미국파가 우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파의 관계개선이 주춤해지면서 다시 논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일·미에 대한 이해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선 일·북수교 추진을 주장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박종철 박사: 다케시다 선생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첫째, 4자회담의 의미,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 본 4자회담의 의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주지하다시피 4자회담에는 의제, 관련국의 역할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 애초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고, 관련당사국도 많기 때문에 긴 시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4자회담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남북한간의 경제분야, 사회문화분야에서 교류협력이 추진되고 있지만 남북한 간의 평화문제를 논의할 직접적인 창구가 없는 현실에서 군사안보문제, 포괄적인 평화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 한 남북한의 교류협력은 언제든지 좌초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북한 간의 군사안보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창구로서 현재 4자회담은 유엔사와 북한장성급대화라는 두 가지 채널과 함께 한반도 군사안보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임시적·과도기적인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둘째,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미정책공조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거 김영삼정부 시절에는, 특히 북한 핵문제에 해결방법을 놓고 한국과 미국 간에는 정책적인 우선순위와 입장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김대중정부의 대북포용정책과 미국의 연착륙정책은 상당한 정도에서 상호 접근점을 이루고 있다고 봅니다.

그 구체적인 성과를 열거하자면 첫번째, 대북경제제재 해제 수순에 관해서 한·미간 고위정책협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유엔사와 북한장성급 간의 접촉이 한·미 간의 정책협약에 의해서 개설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번째, 경수로 건설과 관련하여 미국이 중유제공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경수로 분담금을 한·미·일 간에 합의한 것도 한·미공조의 한 성과입니다.

셋째, 남북정상회담의 조건과 시기에 관해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남북정상회담은 당연히 김정일의 공식적인 주석취임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남북정상회담의 대외적인 조건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다케사다 선생께서는 미·북 연락사무소 개설문제, 일·북수교협상 재개문제와 남북정상회담의 시기문제를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반드시 연계되는 사안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남북정상회담이 국면의 주도권을 장악해서 미·북 연락사무소 개설이나 일·북수교협상 이전에 성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에 있어서는 이러한 대외적인 조건보다는 남북한의 국내적인 조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3 회의

- 발 제: 「동북아시아 정세와 한·일 안보대화의 필요성」
다케사다(武貞秀士,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 실장)
「대북경제지원을 위한 한·일간 협력방안」
오승렬(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사 회: 시게무라(重村智計, 일본 매일신문)
- 토론자: 차영구 박사(국방부)
배정호 박사(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야마구찌(山口昇, 육상자위대 대령)

동북아시아 정세와 한·일 안보대화의 필요성

다케사다(武貞秀士)
(일본 방위청방위연구소 실장)

1. 동북아시아 정세

동서간 냉전이 종결된 후 신뢰조성이 진전된 유럽이나 지역협력이 진전된 동남아시아와 비교해 보면, 동북아시아는 복잡한 양상을 나타

내고 있다. 현재의 동북아시아 정세의 특색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가. 미국의 지도력이 강화되고 있다.

- 작년 후반 이후 아시아 금융위기의 수습과정에서 미국이 지도력을 발휘해 왔다.
- 미국과 북한 간에 연락사무소의 설치문제와 경제제재 완화, 미사일 규제 문제 등에 관한 협의를 있었다. 미국의 지도력은 북·미협약에 나타나 있다.
- 김대중정부 출범후,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되어 한·미관계의 강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 클린턴의 중국방문으로 미·중 우호관계가 강화되었다.
- 1996년 4월 하시모토(橋本)·클린턴의 일·미 안보공동선언 이래 신 가이드라인의 채택까지의 과정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미 안보관계는 강화되고 있다.

나. 중국의 군사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군관계를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다. 북한과 파키스탄의 미사일 협력 가능성이 예견되는 시기에 이루어졌다.

얼마전 중국 부참모장의 북한방문은 북·중 군사관계의 강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 중국 군사력의 근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육·해·공군의 합동연습이나 상륙연습을 포함한 대규모 연습이 실시되고 있다. 남사군도(南沙群島)에 대한 활동거점을 강화하고 일본 주변해역에서는 해양조사선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 중국은 해군군함 820척, 잠수함 100척, 공군작전기 3,740기 등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고, 러시아로부터 SU-27 전투기와 신형지대공 미사일인 SA-10을 도입하고 있어 근대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에 중국이 결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파키스탄에 대한 미사일 기술 제공 이외에 중동지역에 대한 미사일 기술 확산에 중국이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다. 북한의 동향에는 불안감이 남는다.

- 금년 6월에 북한 잠수정 침투사건이 있었던 바와 같이 북한은 한국에 대한 침투공작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개발, 대량파괴무기의 외국에의 확산 의혹, 소형잠수함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 아시아의 금융위기로 인해 KEDO의 협력상태가 원만하게 진전될지 여부는 미국 의회의 태도에 달려 있다. 식량지원문제 등에 대

한 국제적인 협조체제가 정비되지 않고 있다.

- 남북한 간에는 민간차원에서의 교류가 계속되고 있지만, 남북대화는 재개되지 않고 있다.
- 북한의 핵개발의혹은 가시지 않고 있다. 북한은 KEDO의 비용분담이 확정되지 않는 현실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KEDO의 분담금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북한의 전력사정 개선을 위한 경수로 공급사업은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 북한은 군을 중심으로 한 체제가 강화되고 있다.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에서 군인의 진출이 두드러졌다.
- 북한이 경제곤란이나 식량위기를 외교적 협상에 활용하고 있는 듯한 부분도 있어 최근에는 '북한붕괴론'이 그림자를 감추고, '교섭에 능숙한 북한'이라는 이미지가 정착되었다.

2. 대량파괴무기의 확산과 북한

가. 미사일 확산

북한을 중심으로 한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은 심각한 문제이다. 북한은 스커드B 미사일, 스커드C 미사일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고, 노동1호 미사일은 이미 실전배치된 것으로 보인다. 이란·시리아에 대한 미사일 판매도 지적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능력은 중동에서

평판이 좋다. 북한은 미사일을 포함하여 연간 2억 달러에서 10억 달러의 무기를 수출하고 있고, 세계의 무기시장에서 평가를 받을 만하기 때문에 북한제무기의 기술수준은 낮은 것이 아니다.

핵탄두의 제조기술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핵실험을 하지 않은 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외국에 의뢰하여 실험토록 하고 데이터를 입수하는 방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거 핵실험 사실이 없다고 하여 핵개발 계획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최근에 지적되고 있는 것은 북한이 지하에 핵무기 제조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북한은 장비를 지하에 격납하거나 반지하의 활주로를 가지고 있는 등, 군사관련 시설을 지하에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핵관련 시설을 지하에 건설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다.

나. 외국과의 군사협력관계

동기라는 측면에서 북한이 핵무기(핵탄두와 미사일)를 개발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그 이유로서 ① 1994년 10월 북·미합의 이래, 순조롭게 진행되어온 북·미관계를 무의미하게 하고 싶지 않다 ② 원래부터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 ③ 부품이나 재료를 조달할 자금이 없다 ④ 식량위기로 군사력을 개발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핵무기 개발비용은 무기수출에서 벌어들이는 외화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핵실험을 한 파키스탄의 경우, 핵개발에 5~10억 달러의 예산을 사용했다는데 북한의 무기수출 실적으로 보면, 그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파키스탄의 경우처럼 통상적으로 개발도상국은 무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핵

무기를 개발하는 경우가 있다. 북한의 경우, 하이테크 병기의 개발이 뒤져 있어 지금부터 통상(通常) 무기개발을 서두르더라도 한국을 능가할 수는 없다. 오히려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든다. 미국에 감지되지 않도록 외국과 기술교류를 하면서 무기수출로 확보된 외화로 핵무기 개발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과 파키스탄은 1970년대부터 군사협력관계에 있다. 최광이 총참모장에서 인민무력부장으로 승격한 직후인 1995년 11월 파키스탄을 군사사절단장으로서 방문하여 군사협정을 체결하였다. 1996년 3월에 북한이 파키스탄의 우주·초고층대기연구위원회에 보낸 로켓트 연료에 사용되는 과염소산(過塩素酸) 암모니움이 타이완에서 압수되었는데, 이 때 양국간 협정체결 사실이 밝혀졌다.

파티스탄은 1998년 4월 6일 탄도미사일인 「가우리」(Ghauri)의 발사실험을 성공시켰다. 가우리는 사정거리가 1,450km이며 핵탄두를 부착시킬 수 있다. 미국 정보기관 CIA는 1997년 말부터 조사하였는데 「가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인 노동미사일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 미국은 파키스탄이 실험하기 전에 이를 탐지하고 실험을 중지토록 설득했으나, 파키스탄은 실험을 강행하였다.

「가우리」는 액체연료형 미사일이다. 액체연료는 연료주입에서 시동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군용미사일로서는 부적절하여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으나, 북한에서는 아직 사용되고 있다.

중국의 탄도미사일 연료방식은 지금은 거의 고체연료를 사용하고 있다. 1960년대의 東風2호(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미사일)의 기술을 중국이 제공하였을 가능성은 적다. 왜냐하면 이미 중국은 고체연료 미사일 기술을 파키스탄에 수출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지금에 와서 액체연료를 파키스탄에 제공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기 때문이다.

파키스탄 미사일은 노동미사일이거나 혹은 노동미사일의 기술을 이용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북한으로서는 파키스탄에서 미사일 실험을 한다면, 동해나 동지나해에 발사하여 국제적 여론을 자극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핵탄두를 파키스탄에서 폭발실험할 수 있다면, 북한은 '북미합의 위반'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아도 된다. 파키스탄은 장소를 제공하고, 북한은 물건을 제공하는 상호보완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해석에도 파키스탄이 중국에서 고체연료의 기술을 입수할 수 있음에도 북한에서 액체연료 미사일을 도입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북한과 파키스탄의 관계에는 불분명한 부분이 남아 있다.

다. 이란·중국

미국은 7월 23일 이란이 사정거리 1,300km의 중거리 미사일 「샤하브3」을 발사 실험한 사실을 탐지하였고, 그 이틀 후에 이란의 샤르하니 국방장관은 실험사실을 공식 발표하였다. 그리고 미정부 소식통은 북한의 지원으로 실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1988년까지의 이란·이라크 전쟁때 북한이 이란과 군사협력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 후 이란은 이라크에 비해 미사일 능력이 열세이었기 때문에 미사일 개발을 중점목표로 삼게 되었다. 그 무렵부터 이란은 북한 또는 러시아와 미사일 협력관계를 맺어 왔다. 북한은 스커드미사일 본체를 이란에 수출하였다. 그 때문에 지금까지의 이란기술로 본다면, 사정거리를 급격히 늘린 미사일 발사실험을 했을 때, 북한의 기술이나 실물 그 자체가 입수되었는지도 모른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냉전 종결 후의 북·중 간의 군사

협력관계는 종식되었다는 견해와 전체적인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작년에 북한이 외국에서 입수한 식량의 절반은 중국으로부터 입수된 것이다. 더불어 북한과 중국 간의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1961.7.11 체결)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협력과 지원의 법적 근거가 된다. 8월 3일에는 중국의 부총참모총장이 북한을 방문하였다. 이 방문의 목적은 김정일 주석취임 후의 새로운 긴밀한 군사협력관계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작년 김정일이 총서기에 취임한 그 다음 주에 중국의 군사절단이 북한을 방문한 것은 군사협력관계를 보다 긴밀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중국이 북한에 미사일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불분명하다. 러시아의 기술협력이 없었음에도, 북한의 미사일 기술은 스커드 미사일 시대로부터 갑자기 노동미사일 및 대포동미사일 단계에 이르렀다. 급속히 기술수준이 향상된 이유와 관련하여 중국의 존재에 관심이 집중된다.

그러나 확실한 근거는 없으며, 중국이 주변국가에 대량파괴무기를 간단히 확산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다만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기술발전이 중국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압도적인 핵전력과 북한의 군사력·기술력에 대한 중국의 낮은 평가를 고려한다면, 북한의 군사기술 발전이 중국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하리라고 염려할 이유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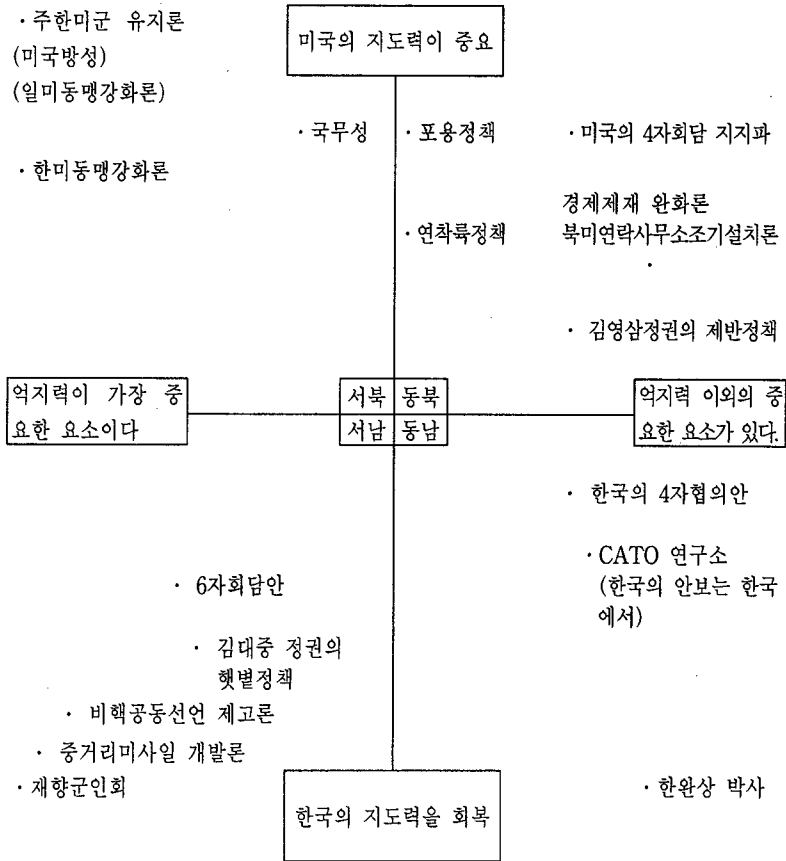
이상과 같이 고려해 볼 때, 이란, 파키스탄, 북한, 중국 등의 사이에는, 각국이 자국의 미사일 기술 향상에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부지불식간에 대량파괴무기 확산망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중동, 파키스탄, 북한, 중국의 '대량파괴무기 확산 네트워크'의 중심에 북한이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3. ‘북한정책’ 논의의 기준은 두 가지

경수로 공급사업의 지연이나 북한의 대량파괴무기의 확산문제가 부각되면,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을 근본부터 재고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었다. 한국에서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에 모든 것을 위임해도 좋은가”라는 의문이 제기되어 “한국이 좀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한국 내에서 대두되어 왔다. 또한 한국 내에는 원래부터 “한국 군사력의 자립성을 높이자”는 논의가 있었다. 이들 논의는 간단히 연결되어 “대북정책도, 안전보장정책도, 외교정책도, 한반도문제에 대해서도 좀더 한국이 주역이 되어도 좋지 않은가”라는 논의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논의를 정리할 때의 지표가 되는 것은 “미국의 지도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것이다.

또한 억지력의 존재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의 여부가 또 하나의 중요한 지표이다. 한국과 미국에 대한 많은 논의를 좌표축을 사용하여 네 가지의 차원으로 정리하면 다음 그림과 같이 된다.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북한과 어떻게 접촉할 것인가”, “북한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결국은 “억지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 이외에 중요한 요소가 있는가”와 “북한에 대한 정책의 주도권을 쥐는 것은 미국인가, 한국인가”의 두 가지 기준을 사용하여 네 개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4. 동북아시아의 대화의 틀 형성

가. No Landing?

북한의 장래에 대해서는 5개의 시나리오밖에 없다. 즉

- 갑자기 붕괴하고 만다(Hard Crash)
- 천천히 붕괴한다(Soft Crash)
- 연착륙한다(Soft Landing)
- 강행 착륙한다(Hard Landing)
- 아무 변화도 없다(No Landing)

북한의 외부환경과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북한에는 “아무 변화도 없다”는 시나리오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식량위기에도 불구하고 체제구축이 진전되고 있으며, 경제위기설이 대두될수록 북한에 대한 지원물자의 양이 늘었다. 그리고 북한은 대화 자세를 보이면서도 대량파괴무기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다. 개혁·개방정책을 기대한 포용정책은 No Landing이 될 위험이 잔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여전히 한반도에는 불안요소가 남아 있다. 이는 지역의 동맹관계나 안보대화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나. 동북아시아의 대화의 틀 검토

동북아시아의 불안정한 구조를 보다 안정된 구조로 이행시키기 위해 많은 대화가 시도되고 있다. 근래에는 일본이 그 주역이 되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대화의 틀에도 장단점이

있다. 대화의 이익과 불이익을 검토해 보자.

A. 「일·미·중」

이 대화의 틀은 일·미관계라는 동맹관계, 일·중관계라고 하는 우호관계, 미·중관계라는 전략적 우호관계를 포함하고 있어 복잡하다. 일·중관계에는 갖가지 고유한 문제가 있으며, 미·중관계라는 전략적 우호관계에는 일본에 알리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다.

이 대화의 틀은 안정된 동북아시아의 삼각형 대화의 틀로 보일지 모르나, 실제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어려운 구조이다. 원래부터 일본이 미·중과 대등하게 삼각형을 구성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B. 「일·미·중·러」

앞에서 언급한 대화의 틀에 러시아를 포함시킨 것이다. 이 틀에는 여섯 가지 경우의 양국관계가 포함된다. 일·미, 일·중, 일·러, 미·중, 미·러, 중·러의 여섯 가지이다. 동북아시아에서 다자간 회의나 대화가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마는 것은 참가국의 수가 늘수록 그 가운데 포함되는 고유한 문제를 내포한 양국관계의 수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즉 이 틀에서는 가벼운 문제만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북방영토문제를 러시아와 일본이 논의할 때, 한국이나 중국이 동의하는 것은 곤란할 것이다.

이 틀에 대해서 중국은 “3(일·미·러) 對 1(중국)이 되어 불리하다”고 생각해서인지 별로 적극적이지 않다.

C. 「일·한·미·중·러」

중국이 이 대화의 틀에는 참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중국이 일·한·미·러 4개국과 대립하게 되었을 때, 고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나아가 일·미·중·러의 틀이 진전되지 못한 채, 한국이 추가된 이 형태가 진전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일·미·중·러의 중재역을 한국이 담당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즉 이 대화의 틀보다는 6자협회가 보다 현실적이다.

D. 「일·미·중·러·남북한」

이 틀에서는 「2+4」나 「6개국의 대등한 참가」, 「2+2+2」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즉 「남북한과 일·미·중·러」라는 구조는 통일문제의 논의는 남북대화의 장에서 해야 하지만, 한반도의 신뢰구축은 나머지 4자를 포함하는 것이 좋다는 발상이다. 이 틀은 한반도 문제를 크게 나누어 '긴장완화문제'와 '통일문제'의 두 가지로 나누어 있고, 통일문제에는 타국이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있다.

「남북한과 미·중과 일·러」라는 틀도 현실성이 있다. 통일문제, 군사 휴전문제, 폭넓은 긴장완화, 신뢰조성, 경제교류문제 등 이슈에 따라서 참가자격이 있는 국가가 교대될 수 있어 한반도문제에는 「2+4」보다도 현실감이 있다.

이 지역에서는 먼저 6자가 관계국이고 일본은 KEDO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국·북한의 참가를 촉진하기 위해서도 러시아의 역할을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가 있을 수 있다. 이는 「6개국이 대등하게 참가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한다.

E. 「일·미·한」

이 틀은 각종 대화의 틀 중에서 가장 발전된 것이다. 1993년 3월에 북한이 NPT로부터의 탈퇴 선언한 이후, 핵무기 개발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 일·미·한 간에 협의가 있었다. Track-1에서의 이 협의는 북한문제를 협의하는 정례적인 협의의 장으로 발전하였다. 이 틀은 일·미, 한·미라는 두 개의 동맹관계를 포함, 일·한관계를 개선시켰기 때문에, 일·미·한 안보대화의 추진은 가장 ‘안정된’ 대화의 틀이 되었다. 이 대화구조의 성패는 일·한 안보대화의 진전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최근 이 지역에서 두드러진 사실은 일·한간 안보의식의 접근이며, 일·한간 인권보장 분야에 대한 대화의 진전이다. Track-1의 일·한 안보 대화가 시작되어 차관보 연차협의로 정례화하게 되었다. 5년 전에는 일·한 간에 이러한 협력문제를 논의하기 곤란했었다.

이미 일·한간에는 Track-2에 의한 안보대화가 상당히 진전되고 있다. 여러 기관이 Track-2의 대화를 진전시키고 있고, 그 중심적 역할을 담당해 온 것이 오까자키연구소이다. 일·한 간의 Track-2의 안보 대화와 학술공동회의의 예로서, 「일본국제문제연구소·외교안보연구원의 회의」, 「오까지키(岡崎)연구소·민족통일연구원회의」가 그것이다. 미국을 포함한 3개국 Track-2 회의(그 가운데 일·한 안보대화를 포함하고 있음)의 예로서 「오까자키연구소·CSIS·여의도 연구소」, 「오까자키연구소·CNC·KIDA」, 「평화안전보장연구소·CSIS·외교안보연구원」이 있다.

5. 한국과 일·미안보 - 견해의 유형화

앞으로 이 지역에서 대화의 구조가 정착되어 갈 수 있는가의 여부는 일본과 한국이 어느 정도 안전보장 분야에서 협력해 가느냐에 달려 있다.

일본 국내에서 한국과의 안보협력에 관한 반대론과 일·미 안보협력에 대한 반대론은 논리적으로 같다. 즉 “일·한 안보협력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와 관계 있다”, “미국의 세계전략에 연계된다”, “냉전 후의 평화적 시기에 불필요한 방위비를 사용하게 된다” 등이 그것이다.

흥미 있는 사실은 한국의 일·미 안보협력이나 신가이드라인의 책정에 대한 견해를 조사해 보면, 일본 국내의 반대론보다도 현실적이며 현상을 이해한 논의가 많다. 한국의 입장에서 최근의 일·미 안보협력에 찬성하고 있는 견해는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가. 보통국가론(한국의 미국연고학자·관료 중에 많음)

“일본이 자국의 안전과 경제이익을 지키는 것만을 생각하지 않고, 국제적 책임을 지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신가이드라인의 책정이나 일·미 안보협력의 내용이 주변사태에 대한 대응을 고려한 것은 이제 일본이 보통국가(normal-state)가 되겠다는 결심을 한 결과이며, 한국은 이를 환영한다”는 견해이다. 이는 “일본이 이제야 보통국가가 되어 간다”는 견해이다.

나. 통일·국방정책 보완론(한국의 국방관계자 중에 많음)

“일본의 안전보장 활동 확대는 한국 국방태세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다”는 현실적인 사고이다.

여기에는 한국의 통일역량 강화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찬성이라는 논의도 포함된다. “일·미 안보가 견고하면, 한국의 북한에 대한 입장이 강화되어 한국 주도의 남북대화가 쉽게 된다”라는 남북관계와 관련시킨 견해도 있다.

다. 미국의 존재강화론(한·미 안보관계를 제일로 생각하는 한국 국방관계자 중에 많음)

“일·미안보가 강화된다는 사실은 이 지역에서의 미군의 존재를 보장하기 때문에, 동북아시아의 항구적 평화 구조를 조성하기 쉽게 한다. 한국은 통일정책에 전념할 수 있다”, “일·미안보의 강화는 유사시 미군의 작전수행을 쉽게 하고 한·미 안보관계의 강화를 의미하고 있어 한국에게는 유리하다”는 견해이다. 가와 비교해 보면 ‘미국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음으로 일·미안보협력 및 신가이드라인에 반대하는 한국의 견해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군사대국화」 반대론

일부 매스컴 및 연구자는 “주변유사시를 구실로 일본이 한반도에 군사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일본이 군사대국이

될 의도를 가지고 신가이드라인을 책정하였다”고 비판한다.

(2) 한국연루론

“한반도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고, 만약 대만해협의 유사시에 대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중국과 일본,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긴장시키는 계기가 되며, 그렇게 되면 한국의 외교적 선택폭을 적게 하거나, 한국의 안정을 위협할 가능성 있다”는 염려이다. “대국의 틈새에 있는 소국의 비애”라는 발상에서 비롯된다. 냉정한 견해를 가진 관료나 학자 중에 많다.

(3) 정치대국화 경계론

“일본이 직접적으로 군사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안전보장상의 역할을 확보하게 되면, 정치대국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한국에 영향을 준다”는 견해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논문에서는 동북아시아의 불안정 요소, 북한의 불안한 징후, 대북정책과 동북아시아의 신뢰조성론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국 내의 일·미관계에 대한 인식을 고찰하였다.

전체적으로 1996년 4월의 「하시모토(橋本)·클린턴안보공동선언」 이래, 한국 내의 일·미안보협력문제에 대한 인식은 변화되어 왔다. 보다 현실적인 관점을 갖게 되었고, 이 지역의 안정에 대해서 일본의 역할을 기대하는 논의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과 한

국 사이의 우호관계가 조금씩 질과 양의 양면에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최근 이 지역의 안전보장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이다. 금후의 과제는 많지만, 일·한 간의 안보대화가 진전되고, 일·미·한 3개국의 안전보장 분야에 대한 인식이 공통점이 많아질 때, 이 지역의 다자간대화의 구조는 보다 현실적인 것이 될 것이다.

대북경제지원을 위한 한·일간 협력방안

오 승 렬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1. 대북지원을 위한 한·일간 협력의 필요성

북한은 1997년 국제사회의 지원을 포함하여 총 163만톤의 곡물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식량난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으며,¹⁾ GDP 역시 1990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다.²⁾ 근래에 북한은 나진·선봉지역의 제도 및 인프라 정비, 석유류 및 초보적 전자·전기제품 등의 위탁가공수출과 원유가공수출 등 수출확대정책 수립, 원산·남포 보세가공지구 설치계획 발표, 한국 및 일본 민간단체와의 농업협력 모색, 농업부문의 인센티브 확대 등 일련의 정책을 시

-
-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997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서울: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 1998), p. 31.
 - 2) 한국은행이 관계기관의 기초자료를 기준으로 한국의 부가가치 및 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한 북한 GDP 추정자료에 의하면 북한 GDP는 1990년 이후 8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97년 -7.7%), 1998년 5월 UNDP와 북한정부가 공동작성하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북한농업의 회복과 환경보호에 관한 주제별 원탁회의」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1994~96년 3년 동안 북한 GDP는 각각 -26.3%, -17%, -17.3% 감소했다. 한국은행 「1997년 북한GDP 추정 결과」(1998.6), Report for the Thematic Roundtable Meeting On Agricultural Recover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in the DPRK (<http://undp-dprk.apdip.net>)

도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중국과 같은 시장지향적 개혁·개방 없이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국제관계 및 남북한관계에 대해 각각 상이한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① 미국 및 일본과는 정치·외교적 현안을 경제실리와 연계하고, ② 국제사회에 대해 북한 경제난을 적당히 노출함으로써 인도적 지원을 획득하며, ③ 중국과의 관계유지 및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을 통해 경제협력을 확대함과 동시에, ④ 남한과의 공식대화는 기피하고 적절한 긴장수준을 유지하되, 민간차원의 경제협업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 하고 있다.

금년 2월 새로이 출범한 한국정부는 북한에 대해 무력도발 불용(不容), 흡수통일 배제, 교류·협력 적극 확대라는 원칙하에, 남북관계 개선의 구체적 수단으로서 민간차원의 대북경협사업은 기업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에 맡긴다는 정경분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관계개선 의지와 정책에 대해 ‘낙제점수’라고 평가하는가 하면 8·15 경축사를 통한 남북대화 상설기구 개설 등 일련의 제의에 대해서 ‘공개질문장’을 발표하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³⁾

지금까지 북한의 경제정책방향을 종합해 보면, 북한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 일련의 조치를 강구해 온 것은 사실이나, 북한식 사회주의체제 및 김정일을 정점으로 하는 기득세력의 정치적 입지 유지에 절대적인 비중을 둔 나머지 지극히 제한적인 정책변화를 보여주었을 뿐이다. 경제정책 결과에 대한 북한당국의 편익·비용적 고려는 ‘현체제의 틀’ 속에서라는 매우 엄격한 전제하에서만 경제정책이 조율되고 있는 기본적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정치적 이념의 제약

3) 「노동신문」, 1998.7.30; 「중앙방송」, 1998.8.20.

하에 이루어지는 부분적인 정책변화는 북한 경제상황을 개선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최근 북한이 시도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내부 경제개혁과 연계되지 않은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외자유치는 투자자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여 그 성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며, 비교우위 개발을 위한 산업구조조정도 시장기구의 작용과 소요재원의 확충 없이는 불가능하다. 무리한 수출확대정책이나 나진·선봉 건설을 위한 국내자원의 투입은 북한의 생필품 부족현상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며, 억압된 제2경제권의 인플레이션 현상도 매우 심각해질 수 있다.

북한 김정일체제는 당분간 기존의 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대외경제관계 개선을 통한 경제회복을 시도할 것이나, 근본적인 경제개혁이 따르지 않는 한 북한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경제의 위기적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이는 곧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항배와 관련, 결정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북한 정치 및 경제체제의 순조로운 전환이 지연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보적 위협과 이로 인한 유형·무형의 비용지출은 양국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막대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야기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위기가 심화된 1995년 이후 한국과 일본은 북한에 대해 막대한 인도적 지원을 시행했으며, 관계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북한관계 및 일·북관계는 획기적인 전환의 기회를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변화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서 한국과 일본은 북한과의 기존 경제관계를 발전·심화시키고, 북한 경제체제 개혁 유도를 위한 정책도구로서의 대북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호간의 협력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한·일-북한간 경제관계 현황

가. 남북한 경제관계

남북한 간의 실질적 경제관계는 한국정부가 제정한 「남북교류지침」(1988.1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1990.8)에 의해 발전할 수 있었다. 경제교류 형태는 중국 등 제3국의 중개 및 국내기업의 현지법인 해외지사를 통한 간접교역에 더해 부분적인 직접교역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경제 침체 이전에는 위탁가공교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비교역부문의 경험사업으로서 1996년 여름에는 남측의 대우와 북측의 조선삼천리총회사가 합영방식으로 남포공단에 세운 남북 최초의 합작회사인 민족산업총회사가 가동에 들어갔다. 최근에는 금강산관광사업과 농업부문의 협력사업도 추진중에 있으나, 아직 본궤도에 오른 사업은 전무한 형편이다. 그밖에 경수로지원 관련 사업과 북한식량난 악화에 따른 지원 역시 남북한 경제관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⁴⁾

그 동안 남북교역 중사기업의 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최근 중소기업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교역규모의 측면에서 본다면 남북교역은 아직 대기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1997년 위탁가공교역을 포함한 남북교역 참여업체 수는 모두 442개 업체에 달했으나, 1989년 이후 반입실적 누계가 1,000만 달러를 상회하는 업체는 불과 13개 업체에 불과한 실정이며, 이들 소수기업의 반입액 합계는 전체

4) 1995.6~98.5 동안 한국의 정부 및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규모는 3억 425만 달러(정부: 2억 7,342만 달러, 민간: 3,083만 달러)로서 같은 기간 동안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총 대북지원규모의 34%를 차지한다. 통일부교류협력국 자료 「대북지원 현황(1995.6~98.5)」(1998.6)

반입액의 69.3%에 달한다.⁵⁾ 한편 남북한간 상품교역 중개지로는 홍콩, 중국, 일본을 들 수 있는데, 1996년의 경우, 이들 3개 국가 및 지역을 통한 중개교역은 남북 총교역량의 85% 수준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홍콩과 중국의 비중이 절대적이다.

그 동안 남북 경제관계는 한반도의 특수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민간부문 경제활동과 정부부문 정책조절수단의 복합적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어 왔으며, 남한정부의 남북경제교류 관리수단은 규제와 지원이라는 이중구조를 유지해 왔다. 정경분리원칙 천명 이전까지는 남북경협과정에서 정부와 민간부문의 상대적 역할이나 정부 정책수단의 실효성 및 파급효과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아직도 남한과의 교역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지속적인 한국정부 배제전략과 간헐적인 정전협정 위반행위를 통해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저해해 왔다.

남북한간 교역규모는 남한경제의 침체로 인해 1998년도 상반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46.5% 감소했으며(위탁가공교역은 16% 감소),⁶⁾ 최근 남한에 큰 피해를 준 폭우의 영향으로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운동도 저조할 것으로 보여 정경분리정책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단기적 효과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남북한간 경제교류의 제도화가 지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민간차원의 경제협력사업에 정부의 일정한 역할이 불가피하므로 정경분리정책의 실천단계에서 '정'과 '경'의 명확한 구분 역시 불가능한 상황이다.

5) 통일부교류협력국, 「월간남북교류협력동향」(제79호, 1998.2)

6) 통일부 교류협력국 자료 「'98년 상반기 남북교역 동향」(1998.7)

나. 일·북 경제관계

일본은 1997년 북한과의 교역규모가 4억 9,000만 달러에 달해 중국(6억 5,600만 달러)에 이어 북한 제2의 무역대상국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과 일본의 무역관계는 1970년대 북한의 무역다변화 정책에 힘입어 1980년의 1,260억 엔을 피크로 1980년대 중반까지 1,000억 엔대를 유지했으나, 북한 경제난 심화와 북한의 대일채무 미변제 등에 따른 무역금융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1990년대에는 대략 500억 엔대에 머물고 있다. 특히 1997년의 경우 북한의 대일본 수출중 최대 수출품목군(총수출중 30.7%)인 섬유제품의 경우, 일본경제 침체 등의 원인으로 인해 전년대비 23.3% 감소한 9,500만 달러 상당을 수출하는 데 그쳤다. 또한 북한의 수입은 잡제품을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에서 줄어들어, 1995년 2억 5,000만 달러로부터 1997년의 1억 8,000만 달러로 큰 폭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북 무역구조는 과거 일본으로부터의 공업제품 수입, 북한으로부터의 원료·소재 수출 등 단순 무역패턴이 1990년대에 들어 위탁가공과 위탁판매무역을 위한 합작·합영사업 위주로 변화하였다. 특히 일본기업에 있어 위험부담은 물론 시장진입 곤란 등의 불리한 환경으로 인해 북한과의 사업동기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연간 5억 달러 규모의 북·일무역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재일조총련기업의 역할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현재 비조총련계 일본기업은 연간 500~600억 엔 수준인 일·북교역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경제적 규모, 북한과의 지리적 근접성 등을 감안하면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다.

1984년 북한이 합영법을 제정한 이후 지금까지 북한에 투자된 합영사업의 90% 이상은 조총련 지도하에 북한에 진출한 재일동포기업

으로서, 순수한 일본기업의 대북한 직접투자는 전무한 실정이며 단지 위탁가공분야에 소수 참여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높은 실패율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조총련 합영사업은 북한경제에 있어서 섬유산업 등 경공업분야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총련계의 취약한 자금사정 및 신용상의 문제로 인해 건당 100만 달러 이하의 소규모 투자가 대부분이었고 1,000만 달러 이상은 10여 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투자대상도 주로 식당, 관광, 금융 등 서비스부문과 의류 등 경공업 분야에 치우쳐 북한이 희망하고 있는 중점유치 희망업종인 대형제조업이나 첨단기술산업,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이루어지지 못했다.⁷⁾

이처럼 일·북 경제관계가 점차 조총련계 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 이유는 양국간 미수교로 인한 무역협정,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금지협정 등 경제관계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며,⁸⁾ 1983년 이후 지불되지 않고 있는 채무의 원금과 이자가 900억 엔에 달해 일본기업의 무역보험 이용, 공적 자금 용자, 연지불 수출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경제관계의 발전이 순조롭지 못한 가운데에도 북한과

7) 1997년 말까지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일본기업의 투자는 전무한 형편이며, 단지 비파관광숙소를 건설한 「만경봉종합개발」을 포함하여 4개의 조총련계 기업이 투자했거나, 투자계약서·합의서를 체결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 「1997년 북한경제동향」(1998), pp. 77~78.

8) 북한의 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일본의 동아시아무역연구회 사이의 합의(1998.1.26)에 따라 「조·일 양국 상사간 상품거래에 관한 일반조건」이 개정되었으며, 현재 개정 일반조건에 따른 계약서 갱신절차가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산하의 상사와 동아시아무역연구회 가입회원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으나(「조선신보」, 1998.6), 이는 어디까지나 기업간의 상품거래 절차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며, 본격적인 경제교류를 위한 제도화의 일환으로 보기는 어렵다.

일본은 수교회담 재개를 포함한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1997년 11월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노동당과 일본 연립3여당대표와의 회담에서 북한의 김양건 부장은 “현 세기초에 있었던 불행한 과거를 새 세기까지 안고 넘어가는 것은 비정상적인 일”이라며 일·북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혔고, 자민당의 모리 요시로 총무회장도 회담후 기자회견에서 “불행한 과거청산을 금세기중에 해결하는 것은 정치가의 책임”이라고 화답하였다. 이는 1990년 정당차원에서 3당공동선언이 채택되었을 때의 테마인 “가깝고도 먼 관계로부터 가깝고도 친근한 관계로”에서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은 1997년 8월 4일 대일관계 개선의사를 표명한 김정일의 논문발표,⁹⁾ 일본 자민당 총무회장과 사회민주당 당수에 대한 김정일의 연하장 전달 등 일·북관계 개선을 희망하는 전향적 제스처를 보이기도 하였다. 한편 1997년 9월에는 북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실무과장 2명이 환일본해경제연구소(ERINA) 초청, UNIDO 주최로 니가타, 동경, 오사카, 나고야, 도야마, 가네자와, 도토리 등 7개 도시를 순회하면서 투자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

그러나 북한과 일본의 관계에서 주목할 것은 경제와 양자 간의 정치현안, 그리고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문제가 서로 맞물려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1997년 4월 북한거주 ‘일본인 처’ 고향방문 문제가 제기된 이래, 11월에는 1진 15명이, 1998년 1월에는 2진 12명이 각각 1주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했다. 일본은 북한과 ‘일본인 처’의 고향방문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미처 고향방문자의 명부도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1997년 10월 9일 2,700만 달러 상당의 대북 식량 지원을 결정했는데, 이는 1996년 6월 UN기구를 통해 600만 달러를

9)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중앙방송」, 1997.8.13.

지원한 이후 미국주도 대북식량지원 움직임에 참여하지 않았던 상황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다.¹⁰⁾

다. 대북경제지원을 위한 한·일협력방안

남북한 관계 및 일·북관계 현황을 살펴볼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한국과 일본은 각각 북한 제3, 제2의 무역상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간접교역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본은 조총련계 기업에 의존하고 있어서 북한에 대한 정책적 레버리지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양국의 경제침체로 인해 북한과의 교역규모가 감소하고 있다.

둘째, 한국정부는 대북 정경분리원칙을 천명하였으나, 개별사업 추진과정에서 정부와 기업의 역할 구분이 모호하여 아직도 기업이 결정한 사업의 성사가 남북한간 정치적 분위기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일본은 대북지원 및 경제교류를 정치현안과 결부시킴으로써 북한의 체제개혁 유도에는 일본이 소극적이며 무관심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즉 한국과 일본은 경제교류 및 지원사업과 관련, 북한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경제적 개방이 필요하다'라는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1995년 이후 한국과 일본이 부담한 대북지원 규모에 비해, 지원과정에서의 주도권 확보 및 지원과정 관리 등의 측면에서 비효율적이었다. 특히 대북 농업지원과 관련,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 근접

10) 그 동안 일본정부는 '일본인 처'의 고향방문, 일본인 납치의혹, 각성제 밀수의혹 등과 관련, 여론악화를 이유로 국제기관의 대북지원 요청을 계속 거부해 왔었다.

성과 기술상의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넷째, 한국과 일본은 대북지원 및 경제교류와 관련하여 장기적 구도, 양국간 협력방안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조율할 수 있는 체계적 의사소통 채널을 가지지 못하고 있어서 북한의 변화에 대응한 공동보조를 취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점 등을 감안하여 향후 대북경제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한·일간의 협력방안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 한국과 일본 간에 정부, 민간기업, 학자 등이 참여하는 「대북경제지원 및 경제교류 협의회」를 구성하여 북한경제실태에 대한 의견교환, 경제지원 및 경협사업의 기술적 문제 협의·협조, 북한과의 장기적 경제관계 발전방향 협의 등을 추진한다. 또한 동 협의회는 실무팀을 조직, 북한정부와 협조하여 대북경제지원을 위한 실질적 프로그램 등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정부가 천명한 정경분리원칙은 보다 많은 접촉과 교류를 통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 공동보조를 맞춘다는 측면에서 일본의 ‘현안 연계’ 방안의 완화를 검토해 볼 수 있다. 특히 조총련 위주의 일·북 경제관계를 개선하여 일본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북한의 대일채무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¹¹⁾

셋째, 아직까지 북한은 남한과의 경협 제도화를 기피하고 있으며, 미수교상태에서 일본과의 경제관련 협정을 맺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므로 남북한과 일본은 물론, 필요시 중국과 러시아도 참여하는 동북아 지역경제협력체를 활성화시켜 다자간 관련 협정을 체결함

11) 최근 유럽채권단은 채권의 주식화, 북한투자에 의한 채권회수 등의 방법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으로써 북한과의 경제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주변국들과 협조하여 북한을 ADB, World Bank 등 국제경제기구에 가입시킴으로써 북한경제의 개방을 촉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결론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과 경제적 접촉면 확대 및 경제관계의 제도화를 통해 신뢰회복과 화해증진의 기초를 마련함으로써 경제교류·협력이 정치·군사관계의 악화를 막는 '완충역할'과 전반적인 관계개선을 유도하는 '선도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이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수세적 입장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시킬 경우, 북한의 방어심리를 자극하여 체제개혁을 지연시킬 수 있다. 경제협력사업 또는 인도적 지원사업을 북한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이용하기보다는 이를 통해 북한이 경제교류·협력의 기반을 형성하는 데 정책적 초점을 맞추므로써 북한의 적대적·방어적 대남·대일 정책이 평화적·상호협력적 정책으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남북한간 및 일·북간 경제관계 발전계획은 동북아 경제권의 형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남북한간 또는 일·북간 경제교류·협력을 축으로 환황해권·환동해권·두만강경제권 등의 형성을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북한의 노동력·자원과 남한·일본의 자본·기술의 결합을 통한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추진하고, 아울러 동북아지역 경제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론>

차영구 박사: 다께사다 선생이 논문에서 제시한 표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논문에는 한·일 안보협력 또는 안보대화를 언급한 부분이 적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 간에는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 안보협력 또는 방위협력이라는 용어 대신에 안보대화 내지는 방위교류 등의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국방차원에서는 협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간의 각종 교류를 포함하기 때문에 동맹을 전제로 한 협력과 구분지어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 30년 동안 한·일간 안보부문의 협력을 돌이켜 보면 최근 3~4년간 교류가 지난 시기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특히 탈냉전의 시대에 들어오면서 국가 간의 외교관계, 안보협력관계가 매우 다변화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한·일 간의 공통의 안보영역이 넓어진 것이 협력 확대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한·일 간의 정책부문의 회의가 처음 시작되었고, 그것을 시발로 해서 한국과 호주, 한국과 러시아, 한국과 불란서·영국·독일 등 적어도 8~9개 국가와의 소위 「양국방위정책기획포럼」(Bilateral Defense Policy Planning Forum)이 생겨났습니다.

한·일간 군사안보부문의 협력에 대해서 네 가지 차원에서 그 중요성과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일 양국의 군과 군 사이의 신뢰형성과 투명성의 보장문제, 서로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아는 문제, 이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둘째, 한국과 일본의 공동의 적은 없지만 공통의 전략적 이해는 많

습지다. 예를 들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문제, 지역내 환경문제, 동북 아시아지역에서의 평화의 기여, 즉 PKO활동문제, 세계전략무기 통제 시스템의 상호협력문제 등 서로 이해를 나누어야 하는 분야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셋째, 한국과 일본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똑같이 동맹을 추구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간접적인 동맹관계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사실상의 동맹관계(de facto alliance)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한·일은 한반도의 급변사태, 그에 대한 위기관리와 대응문제 등에 대한 대화를 긴밀하게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과 일본은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국방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적은 국방예산으로 효율적인 국방을 하기 위해 노하우를 서로 나눌 필요가 있고, 국방경제부문에 있어 공통의 이익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21세기를 지향해서 한국과 일본이 풀어나가야 할 몇 가지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한·일 안보협력의 성격을 규명하고, 목표를 세우는 일입니다. 즉 바람직한 한·일관계라는 그런 의미에서 목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 한국과 미국·일본 간의 안보협력을 좋은 형태로 추진해 나가는 일입니다. 셋째, 운명적인 지정학적 조건하에서 한국이 일본·중국과의 균형 있게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일입니다. 넷째, 한·일 양국의 국내정치적 영향을 배제한 가운데 안보부문 자체의 협력을 모색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과제일 수 있는데, 주한·주일미군의 성격변화와 그에 대한 대응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한·미·일 공동의 과제입니다.

야마구찌: 저는 두 가지 사실을 낙관적인 견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영구 장관께서 지적하셨듯이 한·일 군당국간 협력관계, 안정보

장대화는 생각보다 진전되어 있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일 간의 안보대화는 2국간 또는 3국간 Track-1, Track-2의 차원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는 차영구 장군을 만날 수 있었고, 또 한국의 안보분야 전문가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가이드라인을 책정함에 있어서도 한국측 전문가들과 한국측이 염려하는 부분들에 대한 많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한·일 국방당국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긴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일·한 양국의 국내적인 비판과 우려가 있을 수 있고, 북한과 중국·러시아의 반응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아직 국내적인 조건들이 성숙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Track-1의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가 진척된다면, Track-2의 차원에서 보다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이를 알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신가이드라인, 방위협력지침 대강에서 볼 수 있듯이 위기관리에는 보다 더 중요한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즉 위기상황의 억지 내지는 위기상황을 회피할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평시의 PKO활동, 인도적 지원문제 등 국제적인 공헌을 확대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북아시아 안정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큰 과제입니다.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위해서 더욱 더 견고한 일·미관계를 토대로 중국과 협력관계를 통해서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 신가이드라인 양해사항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일·중관계, 미·중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긴밀해지면 4국간의 4자 회담이 원만히 진행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중국은 북한에 개혁·개방이 북한의 국익에 연결된다는 사실을 설득하고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시 PKO활동에 있어서 일본자위대, 한국군, 중국인민군이 함께 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니다. 이것이 신가이드라인의 숨겨진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배정호 박사: 다케사다 선생 논문의 앞부분은 동북아정세에 관한 것이고, 뒷부분은 동북아안보대화에 관한 것입니다. 논문 가운데 북한군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서의 진출이 두드러졌다고 언급하셨는데, 군을 중심으로 한 체제강화가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 및 남북관계,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차영구 박사님의 다섯가지 과제를 제기하셨는데, 이런 문제는 회의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야마구찌 선생도 군당국 차원뿐만 아니라 좀더 넓은 분야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셨는데, 저 또한 작년 신가이드라인 발표되던 날 이를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한·일 전략적 관계구축 및 한·일 안보협력에 있어서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일본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일본 나름대로의 한·일관계의 특수성에 대한 고민, 일본 국내의 고민과 어려움과 한·일안보의 필요성 및 공통의 안보이익을 일본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토론>

사 회: 다케사다 선생께서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에 대한 좋은 발표를 해주셨고, 차영구 장군께서 토론으로 참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논문발표 수준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선 안보 문제를 다루고 그 다음 다른 문제를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일본 해상자위대 사령관이셨던 야마모토 선생께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야마모토: 전문적이지는 못하지만 한·일 안보협력에 대한 본인의 인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세기는 많은 전쟁이 있었고, 그 저변에는 한 마디로 기독교적인 게르만문화를 핵심에 둔 기독교적 자유민주주의를 확대하려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냉전이 끝났지만 종교문제, 민족문제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문명이 중국에 대처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세계가 쇠퇴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유럽지역에서는 냉전후 안보분야에서 WEU, OSCE 등이 성립되었지만 아시아지역에서는 지역적 다양성·복잡성 때문에 이같은 기구들이 등장하기 불가능합니다. 아시아지역에서는 당분간 미국을 중심으로 한 두 나라 간의 동맹관계 또는 간접적인 동맹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일본과 한국의 협력관계를 생각해야 되고, 일·미·한 안보협력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한 간의 안보협력에 있어 육군과 공군에 비해 해군은 활동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한·일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에 일본과 한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다시 강성해질 수 있는 러시아와 예측할 수 없는 중국, 두 나라를 상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과 한국은 21세기를 맞아 손에 손잡고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영구 박사: 아마모토 선생의 전반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습니다. 한·일 간의 해군관계는 비교적 다른 군에 비해서 현재에도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림팩훈련에 해군에 같이 참여를 하면서 해군 간의 협력이 상당히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 외 앞으로 해상교통로문제, 난민대응문제 등 평화적인 차원에서 해군과 해군이 협력해야 할 분야가 육군이나 공군보다 많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마구찌: 일본측이 제안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하여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한 방위당국 사이에는 많은 교류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고위간부 및 참모총장 간의 대화, 장관 교류 그리고 자위대와 한국군의 유학 교류 등 많은 교류가 있습니다. 두 나라 공군 사이에는 일정한 협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일 사이의 방위교류에 관한 세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한반도유사시에 일정한 일본의 역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자위대는 북한 급변사태나 한반도내 무력충돌이 발생하면 주일미군을 지원해야 합니다. 협력내용에 대해서는 이번 신가이드라인에 명시되었습니다. 이는 한반도유사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방위교류에 관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군사외교

내지 안보외교입니다. 역사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군사부문의 협력이 먼저 이루어진다면 다른 부문의 협력도 원활해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사·외교부문의 다자간 협력도 모색하여야 합니다. 다자간 협력에는 중국군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셋째, 장래에 관한 문제입니다. 향후 북한의 위협이 없어져도 일본과 한국 또는 통일한국은 협력해야 합니다. 일본과 한국은 해상 교통로문제 등에 있어서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에 관한 협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때 가서 협력을 모색한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협력을 의논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여야 합니다.

사 회: 오늘 회의에서는 전반적으로 북한의 정치나 경제실태와 김정일 주석취임 이후 대남정책 등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또한 대북접근방법과 북·일수교문제도 다루었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반도의 안정화와 북한의 변화에 대비하면서 동북아 전체의 발전을 위한 한·일 간의 협력문제에 대한 토론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나까지마 선생께 토론 부탁드립니다.

나까지마: 우선 북한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996~98년 3년 동안 북한을 방문한 친구로부터 전해 들은 것인데, 평양에는 새로운 건물과 지하철이 건설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주민생활은 어려워지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1996년에 제일 어려웠고, 1997년에는 조금 나아다가, 고난의 행군 마지막 해인 올해 또다시 어렵다고 합니다. 오늘 발표된 무역통계와도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농촌을 방문했을 때 전반적으로 주민생활이 피폐해지고 주민들이

쇠약해지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로하는 군인들에게서 물자부족현상을 느낄 수 있었고, 철로 침묵이 여러 가지 크기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인프라가 제대로 안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방 또한 통제가 엄격하였으며 체제가 확고하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내에 붕괴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한·일 안보협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카자키연구소에서는 2년 동안 3개국 학자들이 모여서 「통일후의 한반도」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미·일 안보문제에 대한 Track-2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일 간에 6번 회의가 진행되었고, 7~8번째 회의는 ‘한반도유사시 시나리오’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야마구찌 대령을 중심으로 시나리오와 시뮬레이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양영식 원장께서 개회사에서 지적하셨듯이 한·일 간에는 안보협력뿐만 아니라 경제협력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일의 경제위기가 한·일 경제협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두 가지의 견해가 있는데, 저는 양국의 경제위기 극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위기로 인해 상호의존관계가 심화되고 양국이 상대방의 경제적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일 양국은 국내문제, 중국의 존재로 인해 동맹관계를 맺는 것은 어렵지만, 통일과정에 있어 민주주의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사실상 동맹관계를 맺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 회: 예, 감사합니다. 예정된 시간이 지났지만 10분 정도 연장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계진 박사: 발표·토론 잘 들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대체로 북한 권력엘리트 또는 기관들 간에는 갈등이나 경쟁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시계무라 선생께서는 이와는 다른 논지를 전개하고 있어 흥미있게 들었습니다. 시간이 허락된다면 북한 권력 엘리트의 갈등이나 경쟁에 대해서 사례를 곁들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사실 확인 차원에서 질문하고 싶은 것은 국가안전보위부와 통일전선부, 군부 사이의 갈등관계를 말씀하셨는데, 1996년 9월 나진·선봉 투자설명회가 있었던 날 강릉에 침투한 잠수함이 출발하였고, 금년에도 정주영씨의 소떼 방북이 있는 날 동해 잠수정 침투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군부와 타기관과의 갈등이나 경쟁관계를 반영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다음으로 북한 내에는 북·일수교를 먼저 해야 되는 그룹과 북·미수교를 먼저 해야 하는 그룹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그룹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계무라: 북한에서도 박정희정권 당시와 같이 최고권력자가 부하들을 경쟁시켰던 통치방식이 전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는 김정일에 대한 충성이 보다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부들 사이에는 사업성패에 대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예컨대 통일전선부와 군부의 대남라인은 서로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 내에서 크게 보도된 정주영씨의 방북을 북한내 비주도기관에서는 그다지 크게 생각하지 않으며, 이런 일이 있으면 경쟁적인 타기관도 다른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북·미수교를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은 1994년까지 외교부의 기본입장이었습니다. 김용순·김영남을 비롯한 거의 대부분 간부들이 그렇

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과의 수교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감안하면서 선(先) 북·일수교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북한에서는 관련부서 간의 회의를 소집하여 외교정책을 결정합니다. 외교부, 당 국제부, 통일전선부가 참여하고 핵문제와 같은 군사문제가 개입될 때는 군부도 참여합니다. 이 회의에서 관련부서의 담당자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타부처를 설득하게 되면 그 정책방향이 결정됩니다. 타부처를 설득하는 데 중요한 것은 사업의 성과입니다. 실무진에서 합의된 사항은 세 개 부서의 책임자에게 넘어갑니다. 세 개 부서 책임자의 최종합의가 있을 때만 김정일에 보고됩니다. 만약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려됩니다.

김병로 박사: 첫째 시게무라 선생께서 많은 정보를 접하고 계신데, 북풍사건 발생 당시 북한의 입장과 현재 김대중정부에 대한 북한의 평가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경제문제에 대한 지도부의 입장과 향후 정책 전망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스즈키 선생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셋째, 다께사다 선생의 논문 중 매트릭스에 대해 아마모토 선생은 미국의 역지력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점에 대한 다께사다 선생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최춘흠 박사: 다께사다 선생께서 “미·중관계라는 전략적 우호관계에는 일본에 알리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시게무라: 북풍문제와 관련하여 북한 내에서는 전혀 책임문제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통일전선부는 김대중후보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이를 안기부에 역이용 당해 통일전선부도 피해를 당했다는 식으로 설명하여 책임을 모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북한은 경제에 대한 정책이나 방침에 대해 손을 대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다만 농업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하에 농업생산의 증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간 경제담당자들을 교체하여 왔지만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계기로 새로운 경제담당자들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IMF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한국의 기업들이 북한 진출을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라는 점에 기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케사다: 우선 “미·중관계라는 전략적 우호관계에는 일본에 알리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것에 대해 두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클린턴이 방중 당시 방일 여부를 중국측에 문의하였다고 합니다. 강택민은 본인의 방미 당시와 똑같이 해달라고 답변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정치적 의미의 해석을 차치하고라도 일본 내에는 클린턴이 방일하지 않은 데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클린턴이 중국하고만 논의하고 싶은 것이 있지 않은가 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전역미사일방어(TMD: Theater Missile Defense)에 관한 것입니다. 미국은 일본의 지원하에 TMD를 최종 완성하고도 아시아에는 배치하지 않겠다고 중국과 협의하였다는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를 의심스럽게 생각한 것입니다.

또한 북한에 대한 정보, 중국의 최혜국 대우에 대한 부분 등 일본이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같이 일본의 안보·외교와 관련된 중심적인 문제 중 일본이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저는 이것이

미·일 동맹관계를 저해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저의 논문 중 매트릭스에 관한 것인데, 저의 견해는 김대중정부의 통일정책과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합니다. 현재 북한은 미국의 지도력이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도력이 강할수록 남북관계는 소원할 것입니다. 한국 국방의 자주성이 증대되면 증대될수록 북한이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즈끼: 대내경제에 있어 군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부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부만이 자재와 노동력, 수송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핵·미사일 카드와 햇볕정책을 이용하면서 자금과 연료를 획득하려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실질적인 이익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만 남북대화에 응할 것입니다.

시게무라: 북한의 김대중정부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북한간부들 사이에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과격한 비판은 없다고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 비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김용순인데, 그는 김대중 대통령이 강인덕 통일부 장관을 기용한 것을 나쁘게 생각합니다. 강인덕 장관은 북한의 입장과 정책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대남전략을 구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재 북한이 남북교섭에 소홀한 것은 남한과 교섭할 카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점 때문에 처음부터 아주 강력히 나와 무언가 얻어 내려 할 것입니다.

양영식 원장: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워크숍은 매우

유익한 토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시간이 부족한 점이었습니다.

이번 워크숍 마지막 부분에서 동아시아를 둘러싼 군사적 안보협력문제를 중요하게 고려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심도있게 토론하였습니다. 특히 일본측 참가자들이 전략적인 사고를 자극해 준 점은 유익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까다롭고 복잡다단한 문제들이 토의되었는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북한의 경제난국을 중심으로 한 북한체제에 대한 전망이고, 둘째는 군사적 안보환경과 대응체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붕괴를 막아야겠다는 데에는 공감을 한 것으로 봅니다.

후자는 안보전략의 문제입니다. 일단 한국과 일본이 전략적인 동반자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차영구 박사께서 제시하였듯이 공동의 적 없어도 가상의 적을 염두에 두지 않고 과연 군사정책과 전략이 구사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가상의 적에 대한 규정에서 한·일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과 중국이라는 두 존재를 두고 볼 때 한·일 간에 접근하는 입장과 방법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북한과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견지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가느냐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컨대 차영구 박사가 제시한 새로운 개념으로 주동아시아 주둔미군에 대해서는 한·일 간에 아주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점에 관해 우리 연구원측은 심도 깊은 연구를 할 것이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북한체제의 변화문제인데 이 문제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이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에서 대량난민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한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일본측에서도 매우 깊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에서 내려오는 해상난민들은 한일이 긴밀하게 공동으로 대처할 인도적인 과제이고, 그런 면에서 너무 정치적으로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일정

< 세부일정 >

- 09:00~09:10 등록 및 인사
- 09:10~09:20 원장 개회사
- 09:20~09:30 일본측 대표 인사
- 09:30~11:00 제1회의 발표 및 토론 (사회: 다케사다, 武貞秀士)
 - 발표: **북한의 경제실태 분석과 경제정책 변화 전망**
 - 스즈키(鈴木典幸, 일본 Radio Press)
 - 김정일 주석취임 이후 대남정책 전망
 - 김성철(KINU)
 - 토론: 이 호(통일부), 임강택(KINU), 시게무라(重村智計)
- 11:00~12:30 제2회의 발표 및 토론 (사회: 허문영(KINU))
 - 발표: **일·북 국교정상화 전망**
 - 시게무라(重村智計, 일본 매일신문)
 -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전망
 - 박종철(KINU)
 - 토론: 김영춘·이교덕(KINU), 다케사다(武貞秀士)
- 12:30~14:00 오찬(강인덕 통일부 장관 초청)

14:00~15:30 제3회의 발표 및 토론(사회: 시게무라(重村智計))

● 발표: 동북아시아 정세와 한·일 안보대화의 필요성

- 다케사다(武貞秀士,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

대북경제지원을 위한 한·일간 협력방안

- 오승렬(KINU)

● 토론: 차영구(국방부), 배정호(KINU), 야마구찌(山口昇),

스즈끼(鈴木典幸)

15:30~15:50 Coffee Break

15:50~17:50 종합토론 (사회: 유호열(KINU))

● 북한변화 시나리오(scenario) 및 북한의 장래

● 일본의 대북 정책과 한국의 대북 '햇볕정책'과의 접목

最近 發刊資料 案內

■ 연구보고서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최진욱	著	6,000원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이우영	著	6,000원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김학성	著	6,500원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황병덕	著	6,000원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손기웅	著	7,000원
96-06	북한과 주변4국의 군사관계	鄭永泰	著	6,000원
96-07	韓·美 安保協力 增進方案 研究	金國新	著	4,000원
96-08	東北亞 平和體制 造成方案	余仁坤 金永椿 申相振의共著		10,000원
96-09	北韓 經濟改革의 最適方向 研究	吳承烈	著	6,500원
96-10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조민	著	5,000원
96-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著	5,000원

96-1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성호	著	5,500원
96-14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서재진	著	7,500원
96-15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	김도태	著	4,500원
96-16 KEDO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협력이론을 중심으로	전성훈	著	5,000원
96-17 남북한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연구	박순성	著	4,000원
96-18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박종철 김영운 이우영	共著	7,000원
96-19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허문영	著	5,500원
96-20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 관계	김규륜	著	3,500원
96-21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	남궁영	著	6,000원
96-22 한-러 안보협력 방안 연구	강원식	著	8,500원
96-23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김성철 정영태 오승렬	외共著	8,500원
96-24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연구	이교덕	著	4,500원
96-25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	최수영	著	4,000원

96-26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전망	이헌경 著	6,500원
96-27 한·일 안보협력방안 연구	전동진 著	4,500원
96-28 북한의 유일체제와 정책경쟁	안인해 著	5,500원
96-29 韓·中 安保協力方案 研究	崔春欽 著	3,500원
97-01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강원식 著	5,000원
97-02 북·일수교와 남북한 관계	이교덕 著	3,500원
97-03 경수로인력의 북한체류시 법적 문제	제성호 著	7,000원
97-04 中·北關係 전망: 미·북관계와 관련하여	신상진 著	4,000원
97-05 북한 환경개선 지원 방안: 농업분야 및 에너지효율성 개선 관련	손기웅 著	5,000원
97-06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4국의 입장 분석: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박영호 배정호 신상진 조한범 共著	5,500원
97-07 통일한국의 위상	옥태환 김수암 共著	6,000원
97-08 북한 간부정책의 지속과 변화	김성철 著	4,500원
97-09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체제개혁 비교연구	조한범 著	4,500원

97-10	김정일 정권의 안보딜레마와 대미·대남정책 홍용표 著	4,000원
97-11	북한의 지방행정체제: 중앙·지방관계 및 당·정관계를 중심으로 최진욱 著	5,000원
97-12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 김병로 著	6,000원
97-13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도적 지원사례 이금순 著	6,000원
97-14	미국의 대북한 경제정책: 현황과 전망 김규륜 著	3,000원
97-15	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 황병덕 著	5,000원
97-16	통일이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사유화방안 연구 조민 著	5,000원
97-17	김정일 문예정책의 지속과 변화 이우영 著	4,500원
97-18	북한의 국방계획 결정체계 정영태 著	5,000원
97-19	'9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변화 박형중 著	4,500원
97-20	북한의 제2경제 최수영 著	5,000원
97-21	미·북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 박영호 著	5,500원
97-22	북한 장래에 대한 일본의 시각 김영춘 著	3,000원
97-23	북한의 관광실태와 남북한 관광분야 교류·협력방안 김영운 著	6,000원
97-24	클린턴 2기 미국의 대북정책 이현경 著	4,000원

97-25 북한과 주변4국 및 남한간 갈등·협력관계, 1984~1997

박종철 著 5,5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1996

옥태환
전현준
계성호의共著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6

옥태환
전현준
계성호의共著 10,000원

북한인권백서 1997

김병로
송정호 共著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7

김병로
송정호 共著 \$11.95

북한인권백서 1998

최의철
송정호 共著 7,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8

최의철
송정호 共著 \$11.95

■ 연례정세보고서

96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6~1997

6,000원

97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7~1998

5,000원

■ 학술회의 총서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7,000원

96-02 脫冷戰期 韓半島의 戰爭과 平和

9,000원

96-03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9,000원
96-04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7,500원
96-05	南北韓關係 現況 및 '97年 情勢 展望	7,000원
96-06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	8,500원
97-01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	6,500원
97-02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7,500원
97-03	한반도 통일을 향하여: 정책과 국제환경	7,000원
97-04	남북한 사회통합: 비교사회론적 접근	8,500원
97-05	한반도 급변사태와 국제법	4,000원
97-06	북한 경제난의 현황과 전망	7,500원
98-01	남북협력: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	9,000원
98-02	대북정경분리정책: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7,500원
98-03	동·서독의 정치통합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5,500원
98-04	동북아정세 변화와 남북 및 일북 관계 전망	6,500원
■ 통일문화시리즈		
96-01	統一과 北韓 社會文化(上)	10,000원
96-02	統一과 北韓 社會文化(下)	9,500원
97	바람직한 통일문화	9,500원

■ 논총

統一研究論叢, 제5권 1호 (1996. 6)	10,000원
統一研究論叢, 제5권 2호 (1996.12)	10,000원
統一研究論叢, 제6권 1호 (1997. 7)	10,000원
統一研究論叢, 제6권 2호 (1997.12)	10,000원
統一研究論叢, 제7권 1호 (1998. 9)	10,0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5 (1996)	6,5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6 (1997)	9,000원

■ Translation Series

- 97-01 NORTH KOREA IN CRISIS: An Assessment of 7,000원
Regime Sustainability
- 97-02 The Making of a Unified Korea: Policies, Positions, 6,500원
and Proposals

민족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민족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보고서, 국문 및 영문 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 2) 연 회 비 :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일반회원 및 기관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민족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통일연구논총」과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보고서(년평균 25-30권), 학술회의 총서(년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년평균 10-15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본 연구원의 지난자료를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 할 수 있습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142-076)
민족통일연구원 정보자료실 (전화:901-2559, FAX:901-2547)

